

월간

#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April vol. 112

## 2026년 추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제 안전망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역할과 방향을 알아봅니다”



월간

#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April

vol. 112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역할과 방향을 알아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 관계 변화 등 대내·외 중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 때 편성됩니다. 중동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외적 충격에 맞서 우리나라의 민생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편성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추경이 어느 분야에 집중 편성되었고,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http://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4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NOW

04

특별기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10

한눈에 보는 추가경정예산

12

재정 칼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2026년 추경  
-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경은 타이밍이다

-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2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월간 재정동향」4월호 기준

26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32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 FIS 재정

**74**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76**  
재정정보원 소식

**78**  
애독자 코너

## 재정 NAVIGATION

**48**  
재정 제도 이야기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시기와  
문민정부 재정정책의 역사적 시사점

**62**  
재정이 MONEY  
재정지출의 방향을 읽다

**66**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왕조 다시 보기(1)

**70**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명장 김유신,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자원 배분과 재정 효율성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한 대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으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2월 28일 발발한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궤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 유가, 에너지, 해운·물류 및 원자재 공급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 기준 1,439원에서 3월 말 1,500원대까지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해운 물류 이동이 제한되면서 원유와 원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1달러에서 140달러대까지 급등하였으며, 브렌트유 역시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 전반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외 충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3고(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민생경제와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착수하였다. 3월 10일 국무회의와 3월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①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②중동궤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





민·소상공인·농어민 지원, ③수출기업 등 산업 피해 최소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총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안 제출 10일 만인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

### 추가경정예산 재정 총량 및 편성방향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할 경우, 2026년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25.4조 원 증가한 700.6조 원, 총지출은 25.2조 원 증가한 753.0조 원 수준이다. 특히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을 활용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힘썼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다섯 개 부문으로 구체화되었다. ①고유가 부담 완화 10.3조 원, ②민생 안정 지원 2.5조 원,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7조 원, ④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 9.7조 원, ⑤국채 상환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 ① 고유가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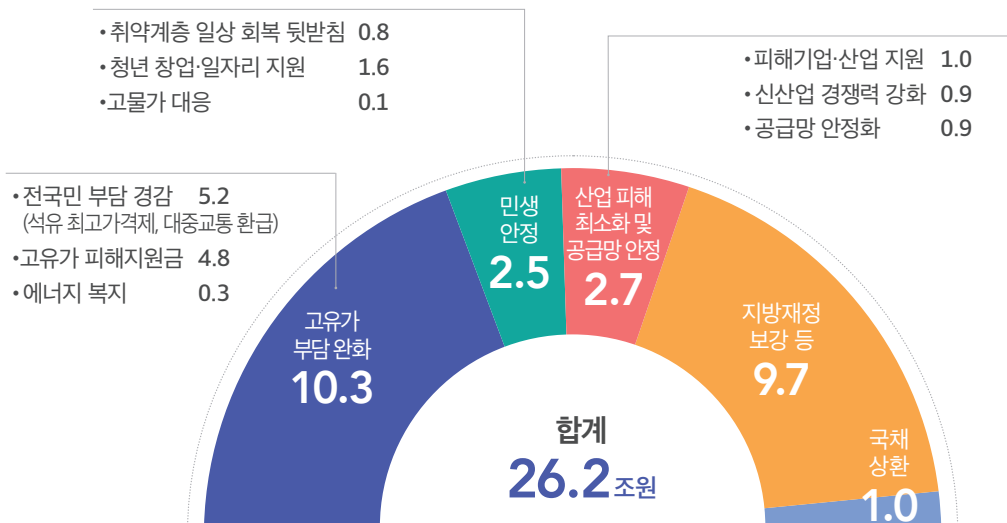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3조 원 규모의 '고유가 대응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정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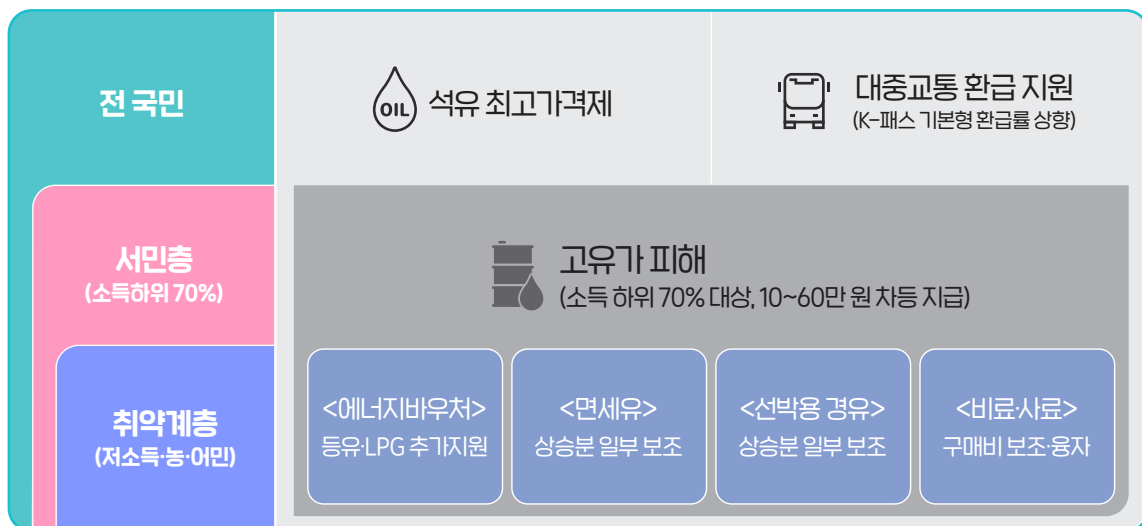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 2025년 본예산       | 2026년 본예산       | 2026년 추경예산      |
|----------------------|-----------------|-----------------|-----------------|
| 총수입                  | 651.6           | 675.2           | 700.6           |
| 총지출                  | 673.3           | 727.9           | 753.0           |
| 통합재정수지<br>(GDP대비, %) | -21.7 (-0.8%)   | -52.7 (-1.9%)   | -52.5 (-1.9%)   |
| 관리재정수지<br>(GDP대비, %) | -73.9 (-2.8%)   | -107.8 (-3.9%)  | -107.6 (-3.8%)  |
| 국가채무<br>(GDP대비, %)   | 1,273.3 (48.1%) | 1,413.8 (51.6%) | 1,412.8 (50.6%) |

먼저, 전 국민의 유류비 및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에 5.0조 원을 반영하고,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지원을 위해 0.2조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또한 4.8조 원을 투입하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 &lt;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gt;



끝으로, 에너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 및 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2억 원을 반영하였다.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사료 구매 비용 등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자금 1,617억 원을 지원하고, 1,185억 원 규모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9억 원을 투입하여 선박용 경유 가격 상승분을 일부 보조하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연안여객선의 손실도 97억 원 규모로 보전한다.

이와 같은 촘촘하고 다층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할수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② 민생 안정

두 번째, ‘민생 안정’ 분야에는 2.5조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등 국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총 0.8조 원 규모의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신규 재원도 마련하였다. 또한 자영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 3,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대출도 각각 1만 명 규모로 추가 지원하여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기 둔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청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확충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창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을 새롭게 추진한다.

끝으로, 서민 생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이 중 800억 원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약 466억 원은 경기 침체 시 소비가 위축되기 쉬운 문화·관광 업종 지원에 투입하여 관련 산업의 회복을 뒷받침한다.

###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세 번째,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7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시의적절한 산업 지원을 추진하여 중동·발 위기가 실제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먼저,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조 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를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정책금융 5,600억 원과 관광업계 대상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경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단위: 억 원)

|    |     | 재정 지원 | 내용                                                                    |
|----|-----|-------|-----------------------------------------------------------------------|
| 합계 |     | 5,600 |                                                                       |
| 대출 | 중진공 | 3,500 | · 긴급경영안정자금(2,500), 시장진출지원자금(1,000)                                    |
| 보증 | 신보  | 500   | · 직·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br>(보증료율 인하, 보증비용 상향 등 조건 우대)                        |
|    | 기보  | 600   |                                                                       |
|    | 무보  | 1,000 | · 수출기업(8,000), 현지법인(2,000) 유동성 공급<br>· 원자재 수입대금(6,500), 신시장진출(13,500) |

다음으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0.9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산업과 문화·예술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이번 추경을 포함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조 원까지 확대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햇빛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뒷받침한다.

또한 0.2조 원을 투입하여 문화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K-콘텐츠 및 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 산업 현장 전반에 AI 대전환을 확산하고,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여 현장에 접목하는 등 제조 공정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한 0.2조 원 규모의 재원도 마련하였다. 끝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0.9조 원을 확충하였다. 이 중 0.7조 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투입하고, 나머지 0.2조 원은 석유 비축 확대,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구축 및 원료 확보, 고환율에 따른 외화예산 부족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④ 지방재정 보강 및 국채상환 등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총 9.7조 원 규모의 재원을 반영하였다. 먼저 9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여 지방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1,000억 원을 활용하여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방채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여 국가채무를 낮추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였다.

### 3.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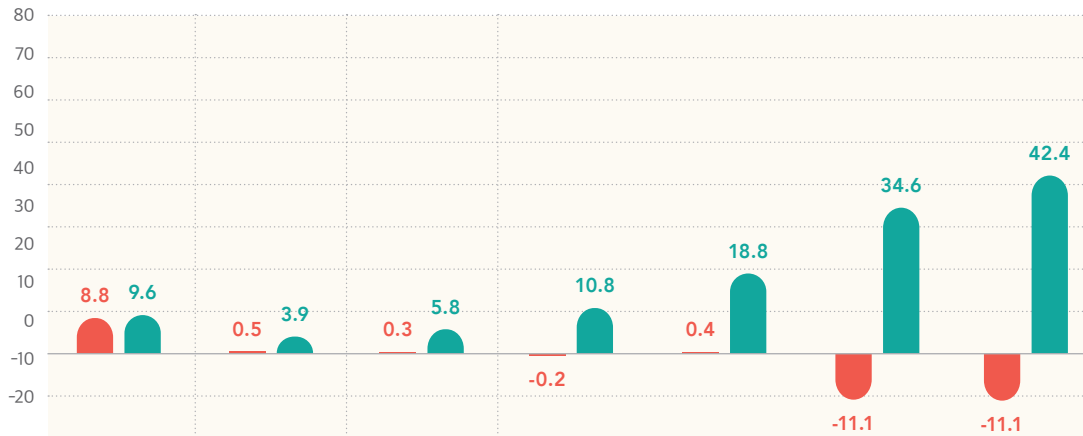
2026년 추가경정예산은 중동 지역 긴장으로 확대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파도를 재정을 통해 넘어가기 위한 대응이다. 급격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의 기반을 지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중동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과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과 기업을 적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은 속도와 책임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재정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모든 부처가 책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예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재정이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용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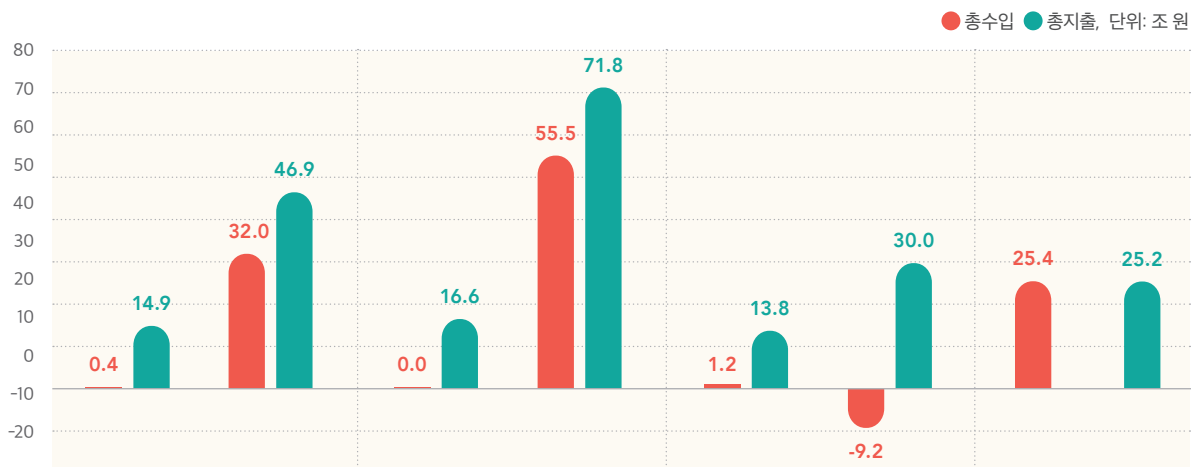
## 시기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추이 및 주요내용

●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조 원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
|-------|----------------------------------------------------------------------------|-------|----------------------------------------------------|-------|------------------------------------------------|-------|-------------------------------------------------------------------------------|--------|-----------------------|--------|-----------------------------------------------------------------------------------------------------------|
|       | 본예산                                                                        | 추경 예산 | 본예산                                                | 추경 예산 | 본예산                                            | 추경 예산 |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                | 제3회 추경 | 제4회 추경                                                                                                    |
| 총수입   | 414.3                                                                      | 423.1 | 447.2                                              | 447.7 | 476.1                                          | 476.4 | 481.8                                                                         | 481.6  | 482.2                 | 470.7  | 470.7                                                                                                     |
| 총지출   | 400.5                                                                      | 410.1 | 428.8                                              | 432.7 | 469.6                                          | 475.4 | 512.3                                                                         | 523.1  | 531.1                 | 546.9  | 554.7                                                                                                     |
| 목적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       |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지역 지원                                  |       | 미세먼지저감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 |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 주요 내용 | 3.4 일자리 창출<br>1.1 일자리여건 개선<br>2.4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br>3.5 지방재정보강<br>0.7 국가채무상환 |       | 2.6 청년일자리 대책<br>1.1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br>0.17 민생관련 정책소요 |       | 3.9 선택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br>1.9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       | 2.1 방역체계 보강고도화<br>4.1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br>3.5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br>1.2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        | 12.2 긴급재난 지원금         |        | 11.4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 대응<br>18.7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 패키지<br>5.0 위기가업·일자리 금융지원                                  |
|       |                                                                            |       |                                                    |       |                                                |       |                                                                               |        |                       |        | 3.9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br>1.8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br>1.5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br>0.4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br>0.2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 비고    |                                                                            |       |                                                    |       | 3.6 국제발행                                       |       | 10.3 국제발행                                                                     |        |                       |        | 23.8 국제발행                                                                                                 |
| 국회의결일 | 7월 22일                                                                     |       | 5월 21일                                             |       | 8월 2일                                          |       | 3월 17일                                                                        |        | 4월 30일                |        | 7월 3일                                                                                                     |
|       |                                                                            |       |                                                    |       |                                                |       |                                                                               |        |                       |        | 9월 22일                                                                                                    |





| 2021                        |                        |                                | 2022                      |                          |        | 2025                                    |                   |                 | 2026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                         | 본예산                       | 제1회 추경                   | 제2회 추경 | 본예산                                     | 제1회 추경예산          | 제2회 추경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 482.6                       | 483.0                  | 514.6                          | 553.6                     | 553.6                    | 609.1  | 651.6                                   | 652.8             | 642.4           | 675.2                     | 700.6 |
| 558.0                       | 572.9                  | 604.9                          | 607.7                     | 624.3                    | 679.5  | 673.3                                   | 687.1             | 703.3           | 727.9                     | 753.1 |
| 맞춤형<br>피해지원 대책              |                        | 코로나19 극복을<br>위한 상생과<br>피해회복 지원 |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및<br>방역 보강   |                          |        | 재해·재난 대응,<br>통상·시 지원<br>민생 안정           |                   | 경기 진작 및<br>민생안정 | 중동전쟁<br>위기 극복             |       |
| 7.4 소상공인<br>긴급 피해지원         | 14.9 코로나19<br>피해지원     |                                | 13.5 소상공인 및<br>사각지대<br>지원 | 28.7 소상공인·<br>취약계층<br>지원 |        | 3.3 산불 피해<br>복구 및 재해<br>재난 예방<br>대응력 강화 | 13.3 소비여력<br>보강   |                 | 10.3 고유가 부담 완화            |       |
| 1.1 고용취약<br>계층 등 긴급<br>피해지원 | 4.9 백신·방역<br>보강        |                                | 2.8 방역지원                  | 7.1 방역보강                 |        | 4.5 통상 및 시<br>지원                        | 2.7 건설경기<br>활성화   |                 | 2.5 민생 안정                 |       |
| 2.5 긴급<br>고용대책              | 2.5 고용 및<br>민생안정<br>지원 |                                | 0.6 예비비                   | 2.2 민생·물가<br>안정          |        | 51 민생지원<br>(소상공인, 영세<br>중소사업자,<br>취약계층) | 1.3 신산업분야<br>투자촉진 |                 | 2.7 산업 피해 최소화 및<br>공급망 안정 |       |
| 4.2 방역 대책                   | 12.6 지역경제<br>활성화       |                                |                           | 1.0 예비비 보강               |        | 0.8 건설 경기보강                             | 1.4 소상공인<br>재기 지원 |                 | 9.7 지방재정 보강 등             |       |
|                             |                        |                                |                           | 23.0 지방재정<br>보강          |        | 0.2 APEC<br>정상회의 등                      | 1.6 고용안전망<br>강화   |                 | 1.0 국제 상환                 |       |
|                             |                        |                                |                           |                          |        |                                         | 1.0 취약계층 지원       |                 |                           |       |
|                             |                        |                                |                           |                          |        |                                         | 1.3 지방재정<br>보강 등  |                 |                           |       |
| 9.9 국제발행                    |                        |                                |                           |                          |        | 9.5 국제발행                                | 21.1 국제발행         |                 | 1.0 국제 상환                 |       |
| 3월 25일                      | 7월 24일                 |                                | 2월 21일                    | 5월 29일                   |        | 5월 1일                                   | 7월 4일             |                 | 4월 10일                    |       |

※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증가분의 합계를 의미함

#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2026년 추경

## 단기 충격 완화를 넘어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계기로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 실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원유·가스·나프타  
동시 충격,  
3중 위기의 정체



26조 추경,  
단기 안정·장기 전환의  
3축 설계



고유가 위기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기회를 만든다



## 왜 이 추경인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봉쇄 38일째인 4월 6일 현재, 해협 통과 선박량은 평시 대비 80~90% 감소한 상태다. 브렌트유는 전쟁 전 72달러에서 3월 한 달 만에 63% 급등하여 118달러를 찍었고, 두바이유는 3월 19일 배럴당 166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EA 비물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52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로 규정하고, 역대 최대인 4억 배럴의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직후 일시적으로 87달러 아래로 하락했던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선 데서 알 수 있듯, 해협이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에 이것은 단순한 유가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역대 최단기간에 편성한 배경이기도 하다.

## 이번 위기는 무엇이 다른가

이번 위기에는 과거와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이란의 카타르 가스 시설 공격으로 카타르에너지는 한국 등 4개국에 LNG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3월 초와 중순 두 차례에 걸친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라스라판·메사이드 가스 시설이 피격되었고, 카타르 측은 연 1,280만 톤의 수출 능력이 가동 중단됐으며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JKM LNG 선물은 전쟁 전 MMBtu당 10.7달러에서 22.35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 '경계', 천연가스 '주의'로 격상되었는데, 원유 '경계' 단계에서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의무화, 나프타 수출 금지, 원자력·석탄 발전 확대 등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조치가 병행된다. 이번 전쟁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체계를 가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까지 수급 불

<표 1> 주요 에너지 위기 비교

| 구분         | 1차 오일쇼크(1973)     | 러시아발 위기(2022) | 이란 전쟁(2026)       |
|------------|-------------------|---------------|-------------------|
| 촉발 요인      | OPEC 금수조치(정치적 결정) | 러시아 가스 무기화    | 호르무즈 해협 물리적 봉쇄    |
| 영향 에너지원    | 원유                | 천연가스(유럽 중심)   | 원유+천연가스+나프타 동시    |
| 유가 상승률     | 약 300%(4개월)       | 약 65%(6개월)    | 63%(1개월)          |
| IEA 비축유 방출 | 미시행(IEA 창설 계기)    | 1.82억 배럴      | 4.12억 배럴(역대 최대)   |
| 한국 위기경보    | 제도 부재             | 발령 없음         | 원유 '경계', 가스 '주의'  |
| 인프라 파괴     | 없음                |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 9개국 40개+ 에너지자산 피격 |
| 복구 전망      | 즉시(금수 해제)         | 수년(파이프라인)     | 3~5년(카타르 LNG 등)   |

주 유가상승률은 위기 발생 직전~최고점 기준. 2026년은 브렌트유 3월 한 달 기준

안에 빠져 있다. 나프타 가격은 전쟁 전 톤당 590~640달러에서 4월 초 1,127달러로 거의 두 배가 뛰었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 중 77%가 중동산이며, 국내 재고는 10~15일분에 불과하다. 여천NCC가 업계 최초로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NCC 평균 가동률은 80%에서 55~60%로 급락했다. 한국은 세계 4위 석유화학 생산국이다. 나프타 수급 불안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셋째, 위기의 지속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중동 지역 9개국 이상에서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파괴된 인프라의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비축유는 시간을 사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공급 정상화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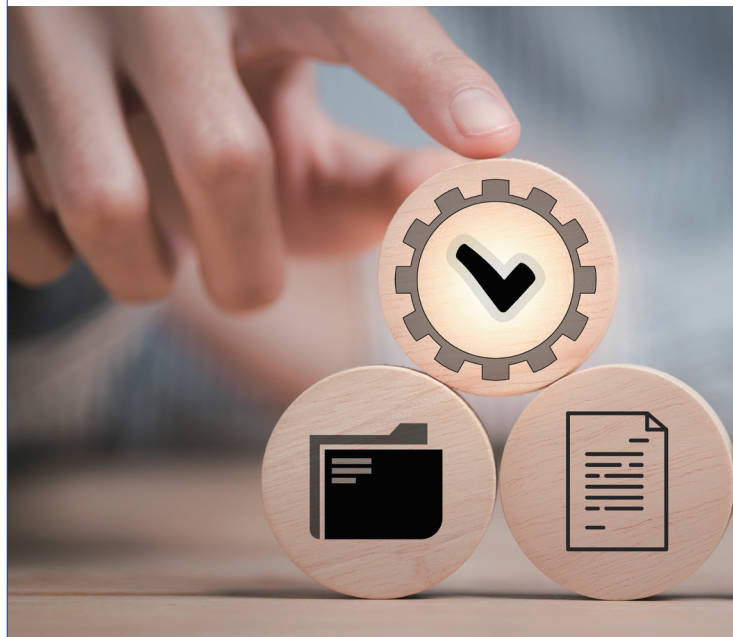
### 추경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축

이번 추경의 핵심 구조를 정리하면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단기 충격 완화다. 가장 큰 비중인 10조 4,000억 원이 고유가 부담 경감에 투입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나프타 수급 안정에 5.2조 원,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 8,000억 원, K-패스 반값 할인·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등 대중교통·농어민 지원에 4,000억 원이 편성됐다. 그중 석유 최고가격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3월 13일 1차 가격 고시(휘발유 리터당 1,724원)에 이어, 3월 27일 2차 고시에서는 국제유가 추가 상승을 반영해 1,934원으로 인상됐고, 유류세 인하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됐다. 경제학적

으로 가격상한제는 수요 억제 유인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나, 공급 충격이 극심한 현재 상황에서 단기 긴급 처방으로서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구조를 택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연계했다.

두 번째 축은 취약계층 보호다. 에너지 위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아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도 이 점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추경은 등유·LPG를 쓰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에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보조비율 50%→70% 상향), 영세 화물선사에 선박용 경유 초과분 50~70% 보조 등 여러 겹의 안전망을 깔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늘려 석유화학 등 업계의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





세 번째 측은 산업 피해 최소화와 에너지·신산업 전환이다. 산업 피해 대응과 공급망 안정에 3조 원, 에너지 전환·신산업에 1조 원이 배정되었다.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을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에 나섰다.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 지원에 6,700억 원이 편성된 것은, 나프타가 원유와 달리 전략비축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프타 수급 안정 예산이 2,000억 원 이상 증액된 것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한다. 정부가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제한까지 발동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석유 비축 130만 배럴 확대(2,000억 원),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확충(81억 원)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39억 원)도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역대 최대인 1조 1,000

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 대규모 확산(150→700개소),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10만 가구, 250억 원),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확대(20→30개소, 588억 원),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9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1조 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1조 원을 국채 상환에 돌렸다.

<표 2> 2026년 추경 지출 구조

#### 지출구조

| 구분            | 금액(비중)            |
|---------------|-------------------|
| ❶ 고유가 부담 완화   | 10.4조<br>(39.7%)  |
| 석유 최고가격제 등    | 5.2조 원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조 원            |
| 대중교통·농어민 지원 등 | 0.4조 원            |
| ❷ 민생 안정       | 2.8조 원<br>(10.7%) |
| 취약계층 청년·물가    | 2.8조 원            |
| ❸ 산업 피해·공급망   | 3.0조 원<br>(11.5%) |
| 피해기업·산업 지원    | 1.1조 원            |
| 에너지·신산업 전환    | 1.0조 원            |
| 공급망 안정화       | 0.9조 원            |
| ❹ 지방재정 보강 등   | 9.7조 원<br>(37.0%) |
| ❺ 국채 상환       | 1.0조 원<br>(3.8%)  |
| 합계            | 26.2조 원           |

#### 재원 조달

| 재원      | 금액(비중)  |
|---------|---------|
| 초과세수    | 25.2조 원 |
| 기금 자체재원 | 1.0조 원  |
| 합계      | 26.2조 원 |

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8%(본예산 △3.9%), 국가채무비율 50.6%(본예산 51.6%).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4., 국회 확정)





## 추경 이후의 장기적인 정책:

###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레버리지

추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경이 쓰인 이후의 모습이다. 위기를 구조 전환의 레버리지로 삼을 때,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일본은 에너지 단위<sup>1)</sup>를 12년 만에 30% 개선했고, 2022년 러시아발 위기 이후 EU는 REPowerEU로 재생 에너지 목표를 42.5%로 상향했다. 두 사례 모두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질을 바꾼 경우다. 한국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에서 가격 보조 성격의 지출(약 10조 원)은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에너지·신산업 전환 1조 원의 활용 방식에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전기화물차 보급이 단기 보조와 병행될 때, 보조금의 효과가 중장기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문 에너지집단 개선 활동의 투자 회수기간 중앙값은 약 2.2년이며, 고유가 시기에는 더 짧아진다. 효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뜻이다.

공급망 다변화도 시급하다. 한국은 원유의 70%, 나프타의 77%를 중동에 의존한다. 추경의 석유 비축 확대와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은 출발점이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비중동 LNG 장기계약 확대, 나프타 전략비축 도입 검토가 후속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으로 KOGAS의 장기계약 물량 연 610만 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LNG 도입선 다변화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KOGAS가 미국·호주·캐나다 등 비중동 물량을

확보해 둔 것은 다행이지만, 스팟 LNG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산업용 가스비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대비도 필요하다. 원유는 60일분의 비축유가 있고 IEA 공조 메커니즘도 작동하지만, 나프타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 위기의 핵심 교훈 중 하나다.

고유가 시기야말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환에 투자할 골든타임이다. 에너지 비용이 높을수록 효율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추경에 석유화학·철강 고부가 전환 기술컨설팅(90→160개)과 데이터센터 실증(140억 원), 스마트공장 AX 선도(750억 원)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포함된 것은 이 방향과 맞닿아 있으나, 규모 면에서 단기 가격 지원의 1/12 수준이라는 점은 본예산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해외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곧 안보이고, 그 수단이 재생에너지·원자력·ESS의 병행 확대다. 추경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라는 분산형 발전 모델을 도입한 것은 에너지 자급률 제고라는 안보 논리와 맞닿아 있다. 동시에, 정부가 석탄발전과 원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력 수급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 대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원자력·ESS를 조합한 현실적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대한 근본적 방어선이 될 것이다.

### 맺음말: 고유가는 위기가자 기회

이번 추경은 단기 충격 완화,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 축이 균형 있게 담긴 결과물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편성하고 1조 원을 국채 상환에 돌린 재정 규율도 인정할 부



분이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44인, 찬성 214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반값 할인 확대,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등에 6,000억 원을 증액하되 정책펀드·용자 등에서 동액을 감액해 '빛 없는 추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제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재정 지출이 진정한 효과를 내려면, 위기 대응 재정이 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중장기 투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피해지원금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소화기다. 그러나 다음 불을 예방하려면 건물의 내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 원자력 활용, 산업의 연료 전환이 바로 그 내화 구조에 해당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2022년 러시아발 위기, 그리고 지금의 중동 전쟁은 모두 같은 교훈을 반복하

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외부 충격 앞에서 경제 전체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기가 장기화되면 추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는 유가 수준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위기 대응의 재정 여력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전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향후 재정 운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고유가는 위기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에너지 시스템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에너지원단위: 일정한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 추경은 타이밍이다

## 그러나 재정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6년 첫 추경 발표,  
고유가-공급량 위기에  
26조 원으로 맞서다



예측 불가능한 재정,  
세수 불확실성과  
지출 효율성 제고 필요



세수 안정화-지출 효율화,  
재정 예측 가능성의  
회복이 필요



타이밍과 원칙의 조화,  
신뢰 기반의 재정운영이  
국가 미래를 결정





2026년 첫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 추경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갈등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상황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추경을 편성하여 대응에 나선 것은 정책적으로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정책은 속도가 곧 효과라는 점에서 이번 추경의 시의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약 26조 2천억 원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한 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확인된다.

## 고유가 대응

이번 추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이다. 대중교통 환급지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농어민 및 운송업자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와 생산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모든 산업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에너지 비용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비용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동시에 한계를 가진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재정 지원은 일시적 완화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 가격 완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에너지 구조 전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에서 일부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것은 이

<표>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

| 구분     | 금액      | 정책 목적     | 세부사업                                                         |
|--------|---------|-----------|--------------------------------------------------------------|
| 고유가 대응 | 10.4조 원 | 에너지 충격 완화 | 유류비·교통비 경감(5.2조 원)<br>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 원)<br>에너지 바우처 등(0.4조 원) |
| 민생 안정  | 2.8조 원  | 소득·고용 안정  | 취약계층 지원(0.8조 원)<br>청년 창업·일자리(1.9조 원)<br>물가 부담 완화(0.1조 원)     |
| 산업·공급망 | 3.0조 원  | 기업 보호·전환  | 피해기업 지원(1.1조 원)<br>에너지·신산업 전환(1.0조 원)<br>공급망 안정(0.9조 원)      |
| 지방재정   | 9.7조 원  | 지방 재정 보강  | 교부세 확대 중심                                                    |
| 국채 상환  | 1.0조 원  | 재정건전성     | 국가 채무 관리                                                     |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4., 국회 확정)

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 민생 안정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소비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금리와 비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폐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청년 정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정책이다. 경기 침체기에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일회성 지원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재정지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정교화와 사후 관리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산업 및 공급망 대응

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 정책은 이번 추경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 정책금융 확대, 원자재 수급 지원 등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국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정책금융 확대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투자 확대는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고려한 정책이다.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재원 조달의 이면과 재정운영의 과제

이번 추경의 특징 중 하나는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재원 26.2조 원 중 세입 증액 경정을 통한 재원이 25.2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원 마련의 기반이 되는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수 추계 과정에서 정부 전망 오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세수 추계의 오차는 큰 폭으로 반복되어 왔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원과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그 다음 해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원과 30조 원 내외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세수 전망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는 점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전제로 한 추경 편성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위기 지속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실제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충분히 병행되었는지도 생각해볼 점이다.

과거 추경에서는 기존 사업의 감액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병행된 바 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첫번째 추경은 모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일부 마련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이러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시간내 추경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일수록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국민 신뢰를 위한 재정운영의 진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번 추경에서는 예비비가 기존 4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5조 원의 예비비 증액은 2018년 이후 추경에서 증액된 예비비 규모가 최대 1.4

조 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며, 총 9조 원 규모 역시 최근 10년간 예비비 규모인 3~5조 원을 크게 상회한다. 고유가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확보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목적예비비의 사용 범위가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으로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운영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추경이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준비 단계에서 아쉬움이 남는 추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향후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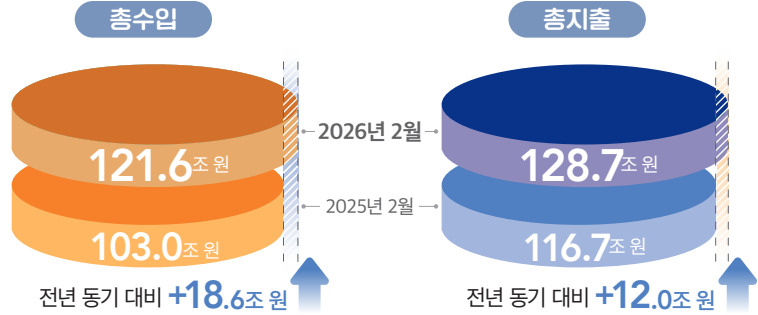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은 타이밍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재정은 동시에 원칙을 필요로 한다. 이번 추경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정 정책의 역할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 지출 효율화의 미흡, 예비비 운용의 모호성 등 재정운영의 구조적 한계 역시 드러났다. 이는 단기적 대응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재정운영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재정은 단순히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다.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갖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위기 대응의 타이밍을 보여주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있다. 그것이 결국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4월호 기준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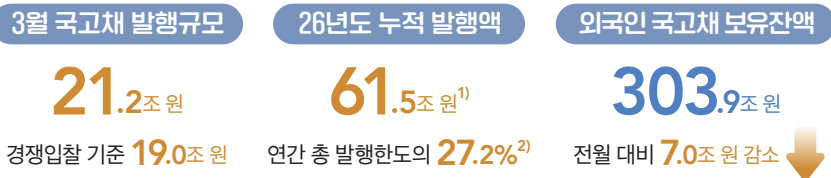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4.

##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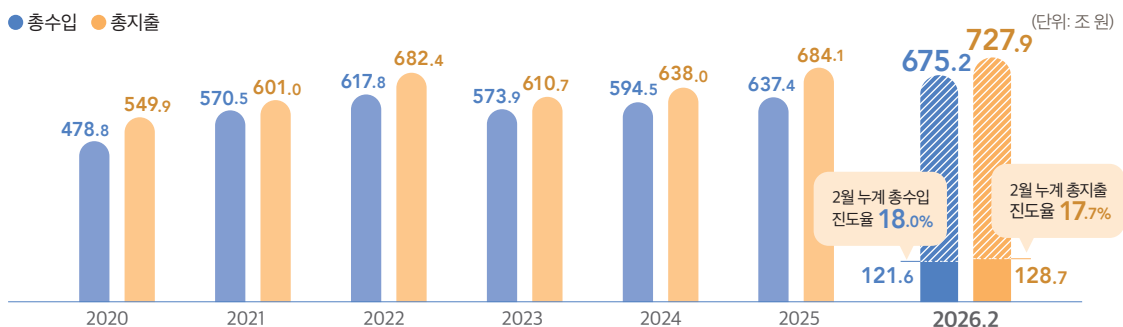
-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2월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4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수정 반영 예정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4.

##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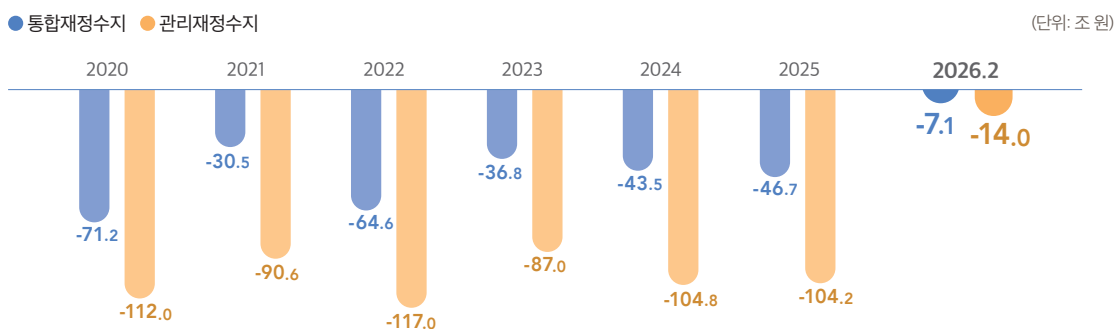
-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0.5조 원 포함시 62.0조 원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 한도액 225.7조 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4.

● 총수입 ●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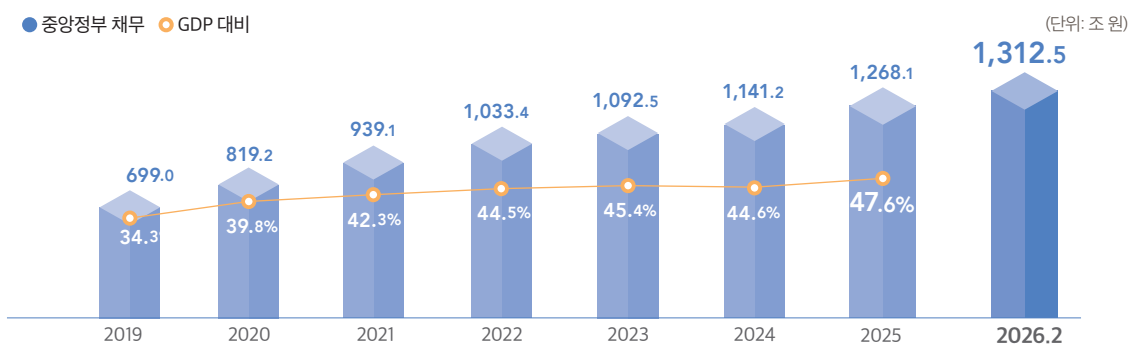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예산 기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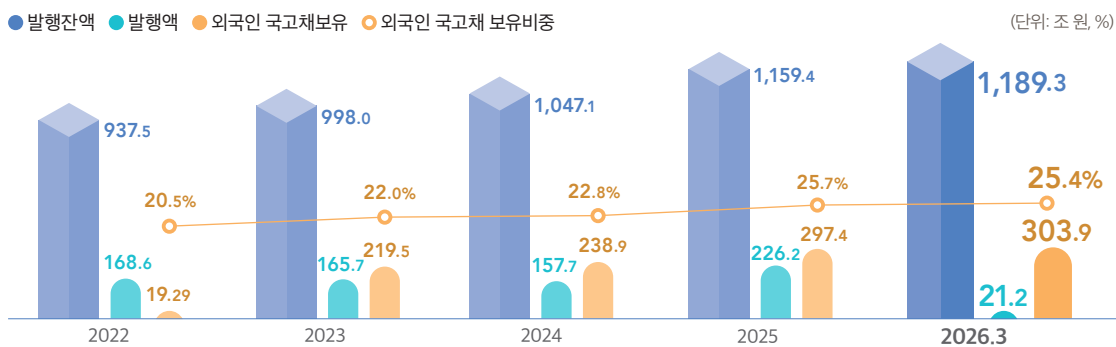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도는 예산 기준

● 중앙정부 채무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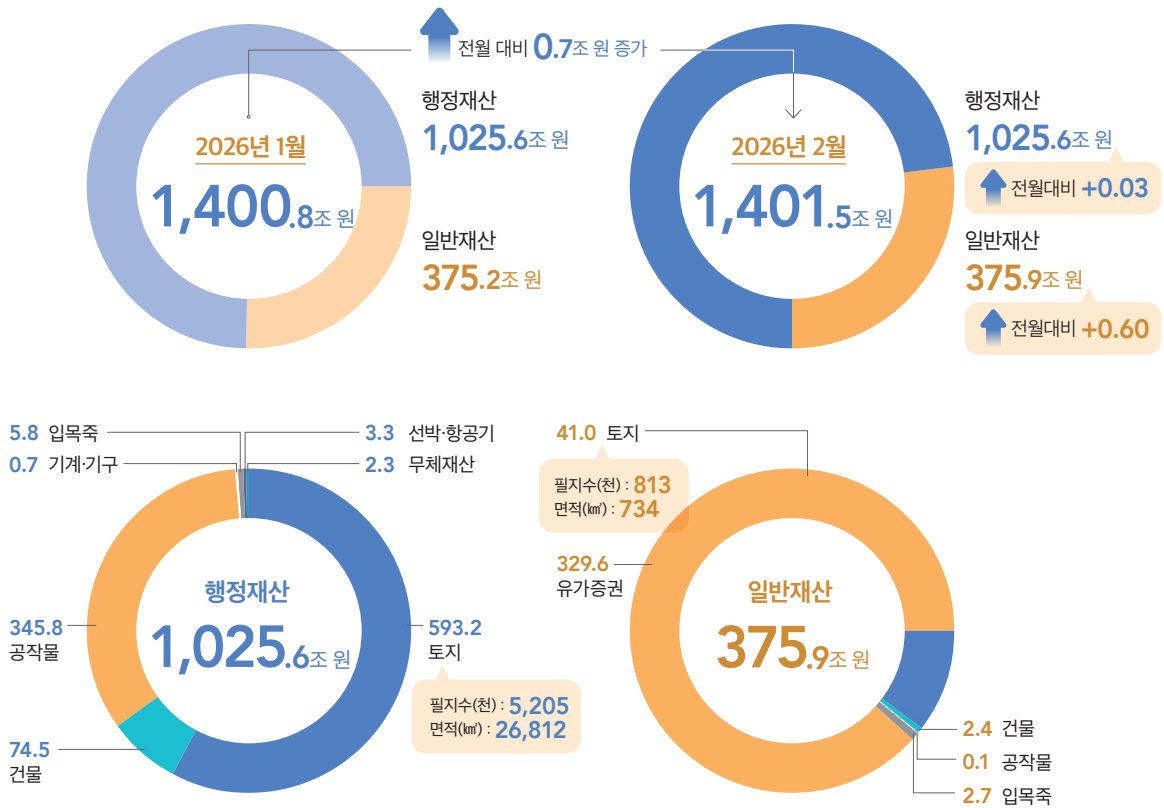


● 발행잔액 ● 발행액 ● 외국인 국고채보유 ●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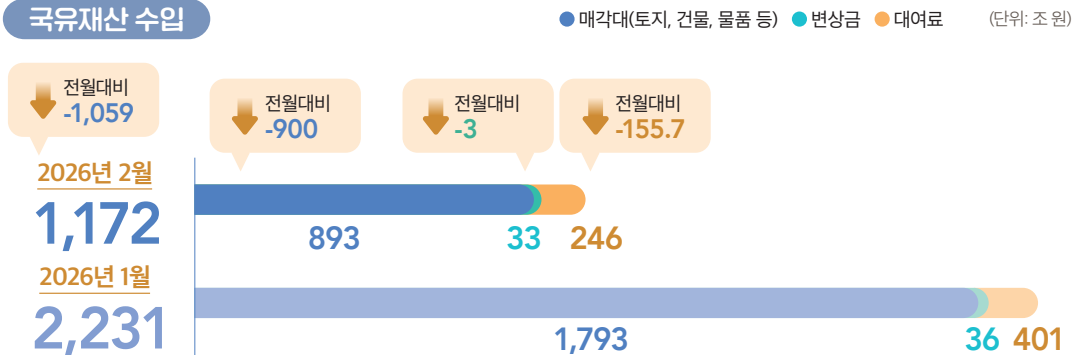
## 국유재산

### 국유재산 현황



- 주 1 2026년 자료는 잠정치  
 2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시: 청·관사, 도로, 하천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국유재산 수입



- 주 1 2026년 자료는 잠정치  
 2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4.



## 정부출자

### 정부출자금

2026년 2월

191조 6,807억 원

전월 대비  
+1,419억 원 증가

2026년 1월

191조 5,388억 원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단위: 개)



###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2026년 2월

191조 6,807억 원

일반회계

872,030억 원

316,351

74,502

475,595

2,581

특별회계·기금

1,044,777억 원

986,264

6,066

50,835

1,611

2026년 1월

191조 5,387억 원

일반회계

870,987억 원

318,308

74,502

475,595

2,581

특별회계·기금

1,044,401억 원

985,943

6,066

50,781

1,611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4.

##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4월호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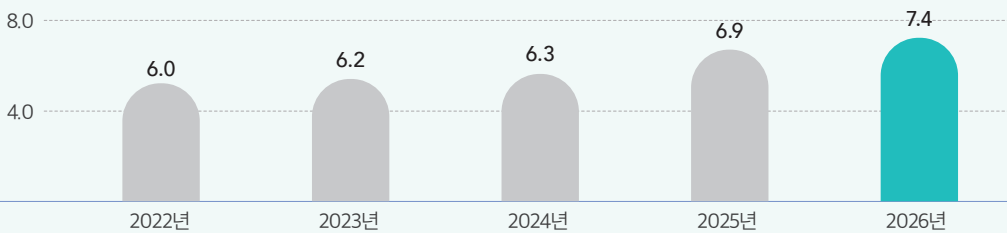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

**임무:** 해양영토(44만km<sup>2</sup>,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수산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4년까지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7.4조 원 중 성과관리대상 6.5조 원(88.7%)

####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조 원, 개)

| 구분       | 내용                       | 2026년 예산 | 비중    | 성과 지표수 |
|----------|--------------------------|----------|-------|--------|
| 전략목표 I   | 세계로 열린 살기 좋은 해양영토를 개척한다  | 1.8      | 27.7% | 5      |
| 전략목표 II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체계를 구축한다 | 2.6      | 39.3% | 6      |
| 전략목표 III |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한다   | 2.2      | 33.1% | 3      |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지표 성격



## 해양수산부

##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 1 해운산업 수송능력



## 정의

우리 수출입화물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는 해상 화물량 중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운송할 수 있는 최대 화물량

## 선정 사유

목표한 선복량을 적기에 확보하면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 및 시장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

## 지표 추이

(단위: 만 TEU)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목표 | 78   | 80   | 90   | 95   | 100  |
| 실적 | 88   | 84   | 91   | 97   | -    |

## 2 수산물 생산액



## 정의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해역별 어업 및 양식 등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 생산액을 측정

##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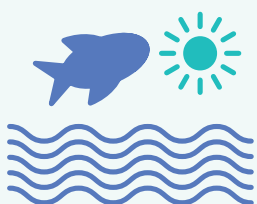
정부가 국민에게 식량공급원으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는지를 파악

##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목표 | 87,288 | 88,161 | 89,042  | 89,842 | 94,723 |
| 실적 | 89,548 | 92,884 | 100,918 | -      | -      |

## 3 해양생태계 건강성



## 정의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수준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지표로,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60%)과 대형저서동물 종 다양도 점수(40%)로 구성

## 선정 사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생물의 종 다양성 정도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 개선

## 지표 추이

(단위: 점)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목표 | 4.12 | 4.43 | 4.7  | 60   | 66   |
| 실적 | 5.05 | 5.06 | 4.3  | -    | -    |

## 해양수산부

### 우수 프로그램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1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 프로그램 목표

수산식품의 명품산업 육성 및 규모화를 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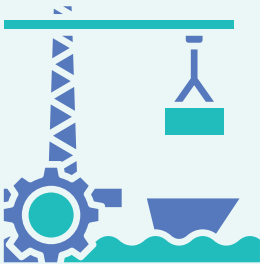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주요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성과가 우수하고, 예산집행도 높은 수준이며, 정부업무평가 우수정책 선정

##### 주요 추진 전략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신제품  
개발 지원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기반 조성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



| 프로그램 예산규모<br>(2026년 예산) | 성과지표        | 2024년<br>목표치 | 2024년<br>실적치 | 달성률    |
|-------------------------|-------------|--------------|--------------|--------|
| 3,027억 원                | 수산물가공식품 수출액 | 1,340백만 불    | 1,467백만 불    | 109.5% |

##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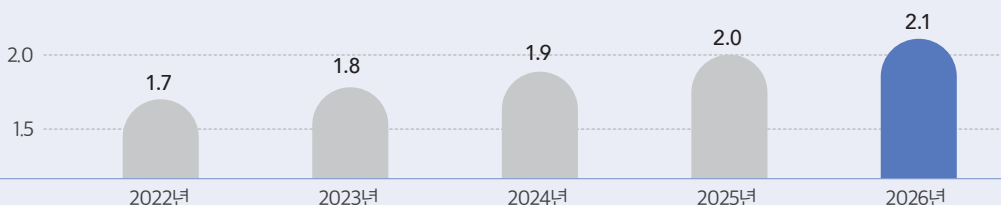
### 해양경찰청

**임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비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2.1조 원 중 성과관리대상 0.9조 원(42.1%)

###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 구분       | 내용                                            | 2026년 예산 | 비중    | 성과 지표수 |
|----------|-----------------------------------------------|----------|-------|--------|
| 전략목표 I   | 세계 최고의 구조안전역량으로 안전한 바다를 창조한다                  | 1,080    | 12.3% | 1      |
| 전략목표 II  | 해양권의 확대 및 글로벌 치안역량을 확보한다                      | 5,072    | 57.7% | 1      |
| 전략목표 III | 완벽한 함정 계획정비 시행으로 함정 가동률 향상 및 해상 경비안전 공백을 방지한다 | 515      | 5.9%  | 1      |
| 전략목표 IV  | 해양환경재난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 292      | 3.3%  | 1      |
| 전략목표 V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중심 혁신을 추진한다                | 1,826    | 20.8% | 1      |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지표 성격





## 해양경찰청

### 대표 성과지표

#### 1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정의**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비율

**선정 사유** 광활한 해양에서 민·관 합동 해양구조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으로 인명구조를 전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지표 추이**

(단위: %)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목표 | 92.0 | 93.1 | 93.4 | 93.8 | 93.9 |
| 실적 | 93.0 | 93.5 | 93.7 | 93.8 | -    |

#### 2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정의** 정밀 검문검색 척수 대비 위반 중국어선 나포 척수의 비율로, 위반율이 낮을수록 조업질서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냄(하향지표)

**선정 사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 외교적 노력 등 해양경찰청의 주권 수호 이행 충실도를 실효성 있게 측정가능

**지표 추이**

(단위: %)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목표 | 10.7 | 10.0 | 9.9  | 8.6  | 8.5  |
| 실적 | 8.0  | 7.8  | 5.4  | 4.9  | -    |



##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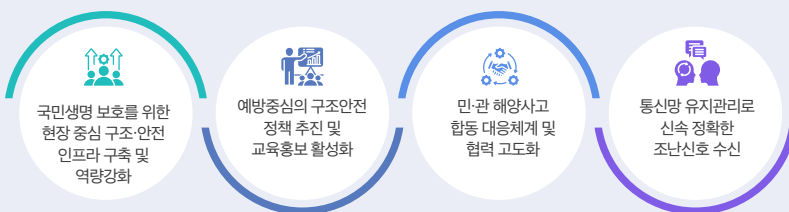
## 우수 프로그램

## 1 구조안전활동

**프로그램 목표** 해양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선정 사유** 재정사업 등 성과평과 결과 양호, 성과지표 달성, 준수한 예산 집행률 등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어 ①해양안전문화 확산, ②수색구조 인프라 확충, ③민·관 구조 협력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의 목표인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함

## 주요 추진 전략



| 프로그램 예산규모<br>(2026년 예산) | 성과지표                     | 2024년<br>목표치 | 2024년<br>실적치 | 달성률    |
|-------------------------|--------------------------|--------------|--------------|--------|
| 1,080억 원                |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br>이내 도착률 | 93.4%        | 93.7%        | 100.3% |

주 '구조안전활동'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도 목표치 및 실적치를 제시함.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2026년 6월에 발표 예정

## 주요국 월간재정 통계

|                       |                     |                     | 총수입                   | 총지출                   | 수지                         |
|-----------------------|---------------------|---------------------|-----------------------|-----------------------|----------------------------|
| <b>미국</b><br>2월 말 기준  | 회계연도 누적<br>(5개월 차)  | 규모<br>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2조 979억 달러<br>11.8%   | 3조 1,024억 달러<br>1.9%  | 1조 45억 달러 적자<br>총수입 총지출    |
| <b>독일</b><br>2월 말 기준  | 회계연도 누적<br>(2개월 차)  | 규모<br>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594억 유로<br>△6.5%      | 931억 유로<br>9.5%       | 337억 유로 적자<br>총수입 총지출      |
| <b>일본</b><br>1월 말 기준  | 회계연도 누적<br>(10개월 차) | 규모<br>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79조 1,214억 엔<br>7.5%  | 93조 9,767억 엔<br>3.5%  | 14조 8,553억 엔 적자<br>총수입 총지출 |
| <b>프랑스</b><br>2월 말 기준 | 회계연도 누적<br>(2개월 차)  | 규모<br>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525억 유로<br>16.2%      | 768억 유로<br>△1.3%      | 243억 유로 적자<br>총수입 총지출      |
| <b>영국</b><br>2월 말 기준  | 회계연도 누적<br>(11개월 차) | 규모<br>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1조 1,165억 파운드<br>8.1% | 1조 2,424억 파운드<br>6.1% | 1,259억 파운드 적자<br>총수입 총지출   |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February 2026(3.31.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February 2026(3.20.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3.19. 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

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février 2026(4.2. 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February 2026(3.20. 발표)

|                        |                    |                     |                   |                   |                      |
|------------------------|--------------------|---------------------|-------------------|-------------------|----------------------|
| <b>대한민국</b><br>2월 말 기준 | 회계연도 누적<br>(2개월 차) | 규모<br>전년동월대비<br>증감률 | 121.6조 원<br>18.1% | 128.7조 원<br>10.3% | 7.1조 원 적자<br>총수입 총지출 |
|------------------------|--------------------|---------------------|-------------------|-------------------|----------------------|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4.

# 해외재정동향(4월)

## 주요국 이슈

### 01 미국

-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및 통화정책 경로 유지
- GENIUS Act 시행령 제정, 디지털 자산 규제 제도화
- 미국-이란 중전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 02 독일

- 독일 경제, 작년 말의 회복세를 뒤로 하고 올해 초 다시 경제성장 둔화
- 독일, 중동 위기 여파로 세수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 독일, 춘계 합동 경제전망(Joint Economic Forecast) 발표

### 03 영국

- 예산책임청(OBR), 2026 춘계 경제전망 및 재정 여력 심층 보고
- 2026~27 회계연도 개시, 국가생활임금 인상 및 조세 구조 개편안 전격 시행
- 공공부채 GDP 대비 100% 임계점 도달 및 재정 준칙 재설계 논의 본격화

### 04 프랑스

- 프랑스 통계청(INSEE), 상반기 물가상승 및 성장 둔화 전망
- 프랑스, 2025년 재정적자 개선에도 대규모 에너지 지원책은 배제
- 차입비용 상승으로 유류세 추가 세수 효과 상쇄

### 05 일본

- 중앙은행(BOJ), 통화정책 성명서 발표
- 내각부, 3월 월간 경제보고서 발간

### 06 중국

- 중국, 전국 단위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방안 발표

## 국제기구

### 01 OECD

- OECD 중간 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02 IMF

- 국제통화기금(IMF), 중동 전쟁이 에너지, 무역,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기고

주요국  
동향



### 3.18. |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및 통화정책 경로 유지<sup>1)</sup>

-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3월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 ~ 3.75%로 동결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흐름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뒤 향후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 이번 결정은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면서도, 경기 둔화와 물가 재상승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신중한 대응으로 해석
  - 성명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다소 상승했다고 표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
  - 반면, 노동시장은 최근 몇 달간 큰 변화가 없어서 고용 둔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진단
-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포워드 가이드언스도 그대로 유지하여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확산
  - \* 포워드 가이드언스: 추가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는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침
  -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금리 25bp 인하 의견을 제기했으나, 연준 다수는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
  - 점도표(SEP)에서는 연말까지 1회 금리 인하 가능성만 반영, 이후 2027년 1회 추가 인하를 거쳐 최종적으로 3.125% 수준에 수렴하는 경로만을 제시
  - 시장이 기대하던 빠른 완화보다 훨씬 신중한 경로로, 사실상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남겨 둔 셈
-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등 경제전망은 모두 직전보다 상향 조정
  - 핵심 PCE 물가상승률은 2026년 2.7%, → 2027년 2.2%로 높아졌고, 성장률 전망도 2026년 2.4% → 2027년 2.3%로 상승
  - 반면 실업률 전망은 큰 변화가 없으나, 향후 경기 하방 위험 경계 의견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장과 연준 내부 모두에서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리되며,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데이터 확인에 초점을 맞출 계획

### 4.8. | GENIUS ACT 시행령 제정, 디지털 자산 규제 제도화<sup>2)</sup>

-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국가혁신법(GENIUS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 확립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
  - \* 국가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 시행령에는 GENIUS Act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 요건을 구현
  -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불법 금융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맞춤형 체제를 제공

1) <https://am.jpmorgan.com/kr/en/asset-management/institutional/insights/portfolio-insights/fixed-income/fixed-income-perspectives/fomc-statement-march-2026/>  
 2)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treasury-proposes-rule-implement-genius-acts-requirements-counter-illicit>



- 이번 시행령은 GENIUS Act에서의 효과적인 제재를 준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
  -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에게는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GENIUS Act에 명시된 의무를 부과
  -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을 현대화하려는 FinCEN의 노력을 반영하여 의무는 목적에 맞게 조정되고, 법 집행을 지원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4.13. | 미국-이란 종전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sup>3)</sup>

-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이란 1차 종전협상이 21시간 이상 지속됐으나 핵무기 포기·호르무즈 통제권·군사 기지 배치 등 핵심 이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결렬<sup>4)</sup>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며,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 해상 봉쇄 준비로 전환함을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이란이 부과하던 통행료와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이란 항구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차단 지침을 발령<sup>5)</sup>
  -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행료 수입을 노렸던 구조에서, 미국이 미국 주도로 봉쇄하는 ‘역봉쇄 구조’로 전환
- JP Morgan은 미국-이란 갈등 재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할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
  -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교역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협착점임을 강조
  - 만약,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인플레이션 격화·금리 추가 인상·자산 가격 하락 경로 전개 가능성 상존
  - 그러므로 전쟁 종식 여부가 2026년 금융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경고
  - 만약 이란 전쟁이 6주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성장률 전망은 0.7~1.0%p 하향, 인플레이션을 0.5~1.0%p 상방 조정할 수 있다고 예측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어지거나, 자연·우회 항로를 통해 원유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유가 급등, 에너지 프리미엄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차질이 발생<sup>6)</sup>
  - 호르무즈를 통한 교역이 6주 이상 차질을 빚을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에 1.5~2백만 배럴/일 수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JP Morgan 리서치)<sup>7)</sup>
  - 호르무즈 긴장 고조 시 Brent는 배럴당 70.50달러까지 치솟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3.1%), WTI도 65.30달러(+3.3%) 수준으로 급등
  - 4월 11일 협상 결렬 직후에도 Brent가 장중 100달러 초반대까지 재진입하는 급등이 관측되는 등 긴장이 지속될 경우 Brent 유가에 10~15달러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될 우려
  - 유럽·아시아의 에너지 수입국은 이란산 유량 감소를 중동·아프리카·러시아산 원유로 보완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

3) <https://www.jpmorgan.com/insights/markets/iran-ceasefire-setup-risk><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all-street-futures-drop-after-us-iran-peace-talks-fail-2026-04-13/>

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us-iran-talks-pause-now-disagreements-remain-2026-04-11/>

5)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free-seas-iran-strait-hormuz-toll-3404b2e1>

6)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iran-holds-strong-cards-in-trumps-blockade-odk3pz9q>

7) <https://www.jpmorgan.com/insights/global-research/commodities/iran-us-tensions-market-effect>

- 주식시장도 미·이란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 우려로 인해 미국 내 주요 지수가 혼조·소폭 하락하는 등 영향이 발생
  - 4월 13일 장 마감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약 0.2% 하락, S&P 500은 약 0.1% 하락, 나스닥 지수는 약 0.3% 하락
  - 변동성 지수(VIX)는 4월 11~13일 사이 18에서 25 수준으로 약 38% 급등
  -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월 6일 4.45%까지 올랐으나, 4월 7일 휴전 합의 발표 후 4.28%로 일시 하락했다가, 4월 11일 협상 결렬과 호르무즈 재봉쇄 지시 후 다시 4.35% 수준으로 재상승



### 3.19. | 독일 경제, 작년 말의 회복세를 뒤로 하고 올해 초 다시 경제성장 둔화<sup>8)</sup>

- 독일 경제는 2025년 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6년 초 들어 산업 생산, 신규 수주, 소매 매출 등 주요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
  - 이란 관련 갈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등 중동 지역의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 회복 프로세스가 취약해진 상태
- 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 신규 수주 전월 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실질 소매 매출 전월 대비 0.9% 감소,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반등
  - 산업 생산은 특히 소비재(-4.2%)와 중간재(-2.6%)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반면, 건설업(+2.9%)과 에너지 부문(+10.3%)은 증가세
  - 신규 수주의 경우, 작년 4월 대규모 공공투자 및 조달 프로젝트로 인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국내 수요(-16.2%)와 해외 수요(-7.1%)가 모두 위축된 결과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1%, 2월 2.0%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였으나, 3월 들어 2.8%로 반등<sup>9)</sup>
  -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7.2% 상승하며 2023년 12월 이후 첫 반등을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실업률, 고용지표 유지에 따른 노동시장 정체 및 기업 파산 증가세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2월 실업률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고용 지표 역시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25년 전체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10.3% 증가, 2026년 초에도 증가세가 지속

8)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6/20260319-the-economic-situation-in-germany-march-2026.html>

9) <https://www.morningstar.com/news/dow-jones/202603304741/german-inflation-rebounds-on-soaring-energy-prices-update>

### 3.20. | 독일, 중동 위기 여파로 세수 감소 및 적자 폭 확대<sup>10)</sup>

- 독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 3월 월간 보고서 발표
  - 지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931억 유로), 수입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594억 유로)
- 부가가치세 정산 방식의 변경 등에 따른 2026년 1~2월 누적 세수 감소, 근로소득세 소폭 증가
  - 2026년 1~2월 누적 세수는 부가가치세 변경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7.6%(45억 유로) 감소
  - 근로소득세는 임금 인상에 힘입어 약 4.5% 증가했으나, 노동시장의 약화로 향후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투자 지출 전년 동기대비 104.2% 급증(94억 유로), 소비 지출 4.1% 증가(837억 유로)
  - 연방고용청에 대한 유동성 지원(34억 유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금에 대한 대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
  - 국방 및 보안(파트너 국가의 보안·방위·안정화 강화 지출) 18억 유로 증가
  - 사회보장(공적 연금 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15억 유로 증가
  - 에너지 지원(전기 요금 완화 보조금) 14억 유로 감소
- 에너지 쇼크로 인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2026년 전체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GDP의 3.5%) 보다 높은 3.75~4.7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4.1. | 독일, 춘계 합동 경제 전망(JOINT ECONOMIC FORECAST) 발표<sup>11)</sup>

- 독일 IFO 연구소, RWI 에센 경제연구소, IWH 할레 경제연구소 춘계 합동 경제전망 결과, 2026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가 기존 1.3%에서 0.6%로 절반 이상 하향 조정
  -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회복세 억제
  -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과 지출 증가로 독일 정부의 재정 운용이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
  - 성장을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조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국방비 증액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투입 등 대규모 재정 지출 수요는 오히려 급증
  -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이 고수해 온 '부채 준칙(Debt Brake)'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7%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음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26-03-federal-budget.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26-03-federal-budget.html)

11) <https://www.ifo.de/en/press-release/2026-04-01/joint-economic-forecast-spring-2026-energy-price-shock-dampens-recovery>, <https://www.rwi-essen.de/en/press/science-communication/press-releases/translate-to-english-detail/joint-economic-forecast-spring-report-2026-energy-price-shock-dampens-recovery-inflation-rises>, <https://www.iwh-halle.de/en/topics/economic-outlook>

- 물가상승률의 일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향후 통화정책과 소비 심리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음
  - 연구소들은 현재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에 머물러 있으나,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반등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
  -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안이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시장 회복 지연,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 유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



### 3.14. | 예산책임청(OBR), 2026 춘계 경제전망 및 재정 여력 심층 보고<sup>12)</sup>

\*재정 여력(FISCAL HEADROOM):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재정 준칙'을 준수하면서 추가로 지출하거나 감세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유분

- 영국 예산책임청(이하 OBR)은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1.1%로 하향 조정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 가용 범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경고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방 리스크가 영국 내 실질 임금 성장을 저해
  - 이로 인해 향후 5년 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핵심 재정 목표 달성이 '면도날 차이(Razor-thin margin)'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분석
- 특히 공공 부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가계 소득 정체와 세수 감소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혁신을 촉구
-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 국가부채 이자 비용은 세수의 약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공공 서비스 지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4.6. | 2026~27 회계연도 개시, 국가생활임금 인상 및 조세 구조 개편안 전격 시행<sup>13)</sup>

- 4월 6일부터 영국의 신규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역대 최대 폭의 국가생활임금 인상과 고소득자 세 부담 강화 등 복합적인 조세·노동 정책이 현장에 적용
  - 국가생활임금은 시간당 £12.71(전년대비 4.1% 인상)로 상향되어 약 3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수혜
  - 반면 중소기업, 산업계에서 인건비 급증에 따른 고용 축소 및 상품 가격 인상 등, 비용 압력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12)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march-2026/>

13) <https://moneyweek.com/personal-finance/tax-year-changes-new-hike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wg2-further-guide-to-payee-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2026-to-2027-employer-further-guide-to-payee-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 조세 측면에서는 소득세 과세 구간 동결이 유지되어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건인(Fiscal Drag)' 현상이 가속화되어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증세 효과를 유발

\*재정건인(FISCAL DRAG): 물가상승으로 명목 소득은 오르지만 면세 한도나 과세 구간이 고정되어, 납세자가 자동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 신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6일부터 투자 소득과 자산 매각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개인 투자자와 기업주들의 세부담이 가중됨
  - 기본세율(Basic Rate) 구간의 배당세율은 8.75%에서 10.75%로, 고세율(Higher Rate) 구간의 배당세율은 33.75%에서 35.75%로 각각 2%p 인상(배당소득 공제 한도는 £500로 유지됨)
  - 자본이득세(CGT): 기업 자산 매각 시 적용되는 비즈니스 자산 처분 규제 세율이 기존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되어, 기업 매각을 통한 자본 회수 비용이 대폭 상승
- 자본이득세(CGT) 면제 한도 축소와 배당세율 조정이 동시에 시행되어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 위축 및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 모니터링이 강화
- 이번 회계연도의 조세 개편은 근로 소득과 자본 소득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적 시도이나, ISA(개인저축계좌) 등 비과세 상품 및 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상존

#### 4.9. | 공공부채 GDP 대비 100% 임계점 도달 및 '재정 준칙' 재설계 논의 본격화<sup>14)</sup>

- 통계청(ON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 부문 순부채가 GDP의 약 98.4%를 기록
  - 심리적·경제적 마지노선인 100%에 근접하며 국가 신용등급 및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짐
  - 고금리 환경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국방 및 교육 예산을 합친 금액과 대등한 수준으로 급증
  - 이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의 정책적 상충(Trade-off)이 극단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 도입 논의가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
  - 학계 및 런던 금융가(The City)에서는 현행 '5년 내 부채 감소'라는 재정 준칙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 제기
  - 특히 최근 중동 이슈로 인해 외교·안보 리스크로 인한 긴급 전비 지출 가능성까지 상존하여 차기 예산 편성 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나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

14) <https://www.bishopfleeming.co.uk/insights/spring-statement-2026-summary-what-you-need-know>



### 3.24. | 프랑스 통계청(INSEE), 상반기 물가상승 및 성장 둔화 전망<sup>15)</sup>

-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26년 상반기 프랑스 경제가 물가상승 압력 확대와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것으로 전망
  - 2025년 12월 전망에서는 상반기 성장률을 1.0%로 보았으나, 3월 24일 수정 전망에서는 0.9%로 하향 조정했으며, 6월까지 1·2분기 성장률은 각각 0.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월 0.9%까지 낮아졌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봄철 2%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 제기
-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긴축은 가계 구매력 및 공공수요를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연초 임금협상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6월까지 가계 구매력은 0.2%, 소비 단위 기준으로는 0.5%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최근 3년간 프랑스 성장의 절반을 뒷받침해 온 공공수요는 재정긴축에 따라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상반기 경제 활동은 소비와 공공수요보다 대외수요와 수출 중심으로 지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3.27. | 2025년 재정적자 개선에도 대규모 에너지 지원책은 배제<sup>16)</sup>

- 프랑스의 2025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로 집계되어, 2024년 5.8% 대비 개선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5년 공공지출 증가율은 2.5%로 전년(4.0%)보다 둔화, 세수는 증세 조치 등의 영향으로 3.9% 증가
  - 2025년 프랑스 공공부채는 GDP 대비 115.6%로, 2024년 112.6%에 비해 상승
- 정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에너지 지원보다는 한시적·표적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운송업, 농업, 어업 등 비용 부담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지원 지속 여부는 월 단위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관련 지원은 추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15)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3/24/plus-d-inflation-et-moins-de-croissance-en-france-pour-le-premier-semestre-selon-l-insee\\_6674099\\_3234.html](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3/24/plus-d-inflation-et-moins-de-croissance-en-france-pour-le-premier-semestre-selon-l-insee_6674099_3234.html)

16) <https://www.reuters.com/business/frances-2025-budget-deficit-comes-lower-than-expected-insee-says-2026-03-27/>

17)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rising-debt-costs-wipe-out-french-fuel-tax-windfall-minister-says-2026-04-03/>



#### 4.3. | 차입비용 상승으로 유류세 추가 세수 효과 상쇄<sup>17)</sup>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프랑스의 유류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국제 차입비용 상승으로 재정상 효과가 대부분 상쇄
  - 2026년 3월 프랑스는 유류세 수입이 약 2.7억 유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같은 기간 정부 차입 비용은 월 약 3억 유로 증가하여, 추가 세입 효과를 사실상 흡수
  - 운송·어업·농업 부문 지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총 추가 재정 부담은 월 약 4억 3천만 유로 수준으로 확대



#### 3.19. | 중앙은행(BOJ), 통화정책 성명서 발표<sup>18)</sup>

- 일본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는 0.7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지만 물가 목표 2% 달성을 위해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점진적 금리 인상을 고려할 방침을 발표
  - 정책위원회는 찬성 8명(UEDA Kazuo 총재 포함), 반대 1명으로 투표하여 기준금리를 결정
    - \*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1.0%로 제안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설명함
  - 우에다 총재는 최근 엔화 변동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비용상승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시사
    - \*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60엔 아래로 떨어져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실질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난 2026년 1월 '전망 보고서(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에서 제시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어 간다면, 정책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경기 상황은 일부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거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 동향은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최근까지 2% 상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현재는 약 2% 정도로 둔화된 상태
  - 수출과 산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기업 이익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다소 하락
  - 기업투자는 증가 추세이며, 주택투자는 감소 추세, 공공투자는 대체로 제자리, 금융 환경은 여전히 완화 적인 상태
  - 민간 소비는 고용 및 소득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특히 식료품) 압력에 영향

18)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2026.3.19.).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319a.pdf](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319a.pdf); "Summary of Opinions at the Monetary Policy Meeting on March 18 and 19, 2026" (2026.3.30.). [https://www.boj.or.jp/en/mopo/mpmsche\\_minu/opinion\\_2026/opi260319.pdf](https://www.boj.or.jp/en/mopo/mpmsche_minu/opinion_2026/opi260319.pdf); Reuters, "Bank of Japan chief signals vigilance to yen moves, impact on economy" (2026.3.3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oj-watching-fx-movement-factor-affecting-economy-governor-ueda-says-2026-03-30/>

- 임금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흐름으로서 근원물가상승률은 2% 초과하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조치로 약 2% 수준으로 둔화
- **향후 경제전망은 소득에서 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강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일시적으로 2% 미만으로 둔화될 가능 존재**
-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금융 및 자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임금과 물가가 상호작용하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고 중장기 물가상승 기대로 기저 물가상승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3.31. | 내각부, 3월 월간 경제보고서 발간<sup>19)</sup>

- **민간소비 회복세, 완만한 기업투자 증가, 대미 무역기업의 이익 개선 등 일본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 수출은 거의 변동 없으며 산업 생산은 정체 상태이나,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물가가 완만하게 상승
  - **단기 전망으로는 고용 및 소득 상황의 개선과 정책의 효과가 완만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변동과 미국의 무역 정책 상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
  - **정부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재정’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강한 일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면서 일본 경제를 회복할 예정
    - 이를 위해 “강력한 일본 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시행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
- \* 강력한 일본 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은 ①국민 생활 속 안전 보장: 물가상승 대응 방안 ②잠재적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 성장 지향적 투자를 통한 견고한 경제 구축 ③국방력과 외교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함
- 중동 정세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연료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국가 석유 비축량을 방출하기로 결정
  -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및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유연한 정책 운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
  - 정부는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 물가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2%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19)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Monthly Economic Report” (2026.3.).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2026mar.html>



### 3.26. | 중국, 전국 단위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방안 발표<sup>20)</sup>

-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장기요양보험제도 구축을 가속화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본격 추진을 결정

\* 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 돌봄과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제도

- 201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3억 1천만 명이 제도에 가입했으며 33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
- 지금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기능장애인으로, 정부는 3년 안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번 조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sup>21)</sup>
  - 중국은 양회에서 연금재원, 돌봄, 노인복지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제도를 발표했으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설명
  - 2035년에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재원은 고용주·개인·정부 보조금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며, 보험료율은 소득 기준 약 0.3% 수준으로 제시
  - 이는 중국의 사회지출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돌봄·복지 중심의 구조적 지출 확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sup>22)</sup>



20) [https://english.www.gov.cn/policies/latestreleases/202603/26/content\\_WS69c48692c6d00ca5f9a0a1aa.html](https://english.www.gov.cn/policies/latestreleases/202603/26/content_WS69c48692c6d00ca5f9a0a1aa.html)

21)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china-launches-long-term-care-insurance-system-alleviate-aging-challenges-2026-03-26/>

22)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china-launches-long-term-care-insurance-system-alleviate-aging-challenges-2026-03-26/>

국제기구  
동향3.26. |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sup>23)</sup>

- OECD는 최근 중동 지역 갈등과 에너지 공급 차질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고 진단
  - 세계 성장률은 2026년 2.9%, 2027년 3.0%로 전망하고, G20 물가상승률은 2026년 4.0%, 2027년 2.7%로 제시
  -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로 2026년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
- OECD는 특히 에너지 가격이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
  - 비료, 알루미늄, 헬륨 등 주요 원자재와 산업 중간재 공급에도 충격이 확산될 수 있어,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에너지 충격이 길어질 경우 세계 생산은 줄고,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오를 수 있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
- 재정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광범위한 지원보다 취약계층과 피해 부문 중심의 선별적·한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일부 기업은 지원하되, 광범위한 보조금이나 가격 통제는 재정 부담이 크고 에너지 절약 유인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 높은 국가부채, 고령화, 국방비 증가, 기후대응 비용까지 겹치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 아래에서 지출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3.30. | 국제통화기금(IMF), 중동 전쟁이 에너지, 무역,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기고<sup>24)</sup>

- 중동 전쟁이 에너지 가격, 공급망,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나, 영향력은 국가마다 차이 존재
  - 전 세계적이지만 비대칭적(asymmetric) 충격으로 작용하며, 특히 에너지 수입국이 수출국보다, 저개발 국가가 부유한 국가보다, 비축량이 부족한 국가가 비축량이 풍부한 국가보다 더 큰 위험
  - 중동 전쟁은 에너지 시장을 통해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을 통해 실물경제를 압박하며, 금융시장을 통해 성장 둔화를 심화시키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글로벌경제 충격으로 작용

23) OECD (2026),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Testing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4623013-en>

- 에너지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혼란을 초래해 수입국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큰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초래
  - 특히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 부문에서는 연료와 전력 요금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구매력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국제수지 악화로 통화 가치가 하락
  -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석유 수출국은 높은 가격으로 대외적인 위치가 강화 될 가능성 존재
- 원자재 가격 상승 외에도 비에너지 및 필수 소비재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세계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에도 또 다른 복잡성을 가중
  - 비료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식량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중 수확량과 작물 생산량에 위협을 가하고 따라서 식량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은 물가 상승 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비료와 식량 가격 급등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
-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부추길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유가 급등은 물가상승률을 상승시키고 성장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겨우 근접한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불편한 물가 압박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에도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임
  - 사람들과 기업들이 물가상승률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임금과 물가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중동 전쟁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가는 하락했고, 주요 선진국과 많은 신흥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으며 변동성이 커졌으나, 국가별로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름
  - 유럽과 많은 신흥 국가에서는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와 기업 모두 차환이 어려워지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및 남아시아의 일부 저소득 경제권에서는 이미 부족한 외환보유고와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이 자금 조달 환경에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는 높은 부채와 긴축적인 금융 여건으로 부채 조달 비용이 더욱 상승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처럼 국내 자본 시장이 탄탄하고 자금이 충분한 일부 수출국 또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같은 중남미 상품 생산국들은 시장 스트레스를 더 잘 흡수
- IMF는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적이면서도 국가마다 불균등하게 나타난다고 평가 하며, 이러한 충격을 관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설명
  - 동일한 충격이 어떤 국가에서는 교역조건 개선이라는 호재로,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수지 악화로, 많은 경제권에서는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설명
  - 따라서 각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신중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외환보유고가 제한적이고 재정 운용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

24) 국제통화기금(IMF Blog), "How the War in the Middle East Is Affecting Energy, Trade, and Finance" (2026.3.30.).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6/03/30/how-the-war-in-the-middle-east-is-affecting-energy-trade-and-finance>.

## 04

2026 April

## | 재정 |



###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기획예산처 3.30.)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
-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각 부처가 '27년 예산안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
-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으로 '27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 '27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성과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과 새로운 시대 구현을 추진할 계획
  - \*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①지방수도 성장, ②모두의 성장, ③안전 기반, ④문화가 이끄는 성장, ⑤평화 뒷받침
-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재정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을 병행할 예정
- 2027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제출 10일 만에 국회 확정 (기획예산처 4.10.)

-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 원을 감액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 원을 증액
-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 원 수준을 유지
-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 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
- 이번 추경예산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확정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

## | 경제 |



###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재정경제부, 4.2)

-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 하락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비 2.2% (2월 2.0%) 상승
-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2%(2월 2.3%) 상승
-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3%(2월 1.8%) 상승
- 중동전쟁 영향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
-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수급관리 등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민생물가 TF 및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가동을 통해 주요 품목들을 집중 점검하고 신속 대응할 방침



## 1월

##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 2월

##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3월

##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발표

## 4월

## | 재정 |

-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확정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 5월

## | 재정 |

-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 국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6월

##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7월

##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 8월

##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 9월

##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10월

##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 11월

##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12월

##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

문민정부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광범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을 달성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종금사 확장, 조세감면 등이 결합되어 대기업 중심의 과잉투자를 심화시켰다. 이는 부실기업 문제와 산업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궁극적으로 1997년 IMF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정책의 명분과 실제 운영의 괴리는 재정정책의 구조적 개혁과 투명한 정책 전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들어가며

문민정부가 들어서던 시기 우리나라는 1986년에서 1988년에 이르는 시기 보였던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3저 호황’을 뒤로 하고 1989년 들어서면서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3저 현상’이 소멸되면서 다시금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지난 고도성장기 이래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왔던 기존의 불균등성장정책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심화되어 왔던 산업·기업 간 등 사회 제 부문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 있었다. 그 이면에서는 이러한 차등적 성과의 정책적 동인이었던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체화되어 왔던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양식(행태)’으로 인해 특권에 기반한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기업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저 호황’ 시기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 제 주체들

의 사회적 내지 공적인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등장한 노태우정부는 종합토지세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혁적 조치들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3저 현상’ 소멸 이후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장질서와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한 기득세력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다시금 성장 기조로 정책방향을 전환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3저 호황’ 시기에도 지양해내지 못한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행태’는 더 깊게 자리잡아가면서 사회 제 부문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가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다(우명동, “1980년대 ‘3저 호황’ 전·후 시기 재정정책의 전개와 역사적 시사점(1)(2), 『나라재정』, 2024년 10월, 11월호 참고)”.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을 물려받은 문민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그에 이어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운용”에서 찾고, “과거 개발연대에 우리 경제의 발전원동력이 되었던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운용은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점차 그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면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경제”를 「신경제」로 정의하고, 이러한 신경제를 통해 ‘신한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경제」의 발전원동력인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문민정부는 이러한 「신경제」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용

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금융, 경제행정규제 등 경제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 93-97』, 1993, 14-17).<sup>1)</sup> 말하자면 과거 개발연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를 지양하면서도 과거의 제7차에 이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sup>2)</sup>에 버금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바탕을 두고 ‘신경제’를 이루어나갈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제 본고에서는 먼저 문민정부가 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에서 밝힌 재정개혁의 과제와 이행내용을 개관한다. 이어서 그러한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재정정책의 총괄적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이 행해지고 조세가 징수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층 내지 부문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경제 구조에 준 구조적 특성을 해명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경제 제 주체들에게 준 사회경제적 영향을 구명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재정정책의 전개와 사회경제적 귀결

### 1. 재정정책의 전개와 재정적 성과

#### (1) 재정정책 기조와 제도개혁

##### 1) 재정정책 기조와 제도개혁 구상

문민정부는 상술한 「신경제」의 취지에 부응하게 재

1. 아울러 이러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취지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11월 17일 제2차 APEC 정상회의 후 호주 순방길에 시드니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밝혔으며,” 이어 “1995년 1월 21일 세계화 추진의 중심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시드니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고 향후 나아가 갈 방향을 정리한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 1995년 1월 25일 발표됨에 따라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세계화추진위원회, 『세계화백서』, 1998, 34).”
2. 우리나라는 5·16 군사정부에 의해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된 이래 박정희대통령 마지막 시기 제4차 계획(1977-1981), 이를 이어 전두환정부 시기 1982년부터 이름을 바꾸어 제5차, 제6차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노태우정부 시기 1992년 3월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듬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폐기하고 1993-1997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기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다시금 새롭게 경제발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가게 되었던 바, 이로써 종합적인 「5개년계획」에 의해 추진해나간 우리나라 경제발전계획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정이 당면한 최우선과제를 “재정의 능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는데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게 문민정부는 1993년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기초”를 “경제안정화를 위한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는데 두고,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능력의 확충과 재정제도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정부 국정5년 자료집: 2. 경제』, 1997b, p. 111).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는 ‘재정기능의 정상화’, ‘세제의 개혁’, ‘재정제도의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내용은 대한민국정부(1993, 53-86)에서 발췌·정리한 것임). 첫째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능력의 확충’과 ‘재정지출구조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 중 먼저 ‘재정능력의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의 제고,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 대책, 수익자부담의 확대, 공공자금의 활용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투자 소요가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유류 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수익자부담의 확대’를 기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투융자 소요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연·기금 및 체신예금 등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던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흡수하여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용하고, 아울러 국공채인수와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으로도 충당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어 ‘재정지출구조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비중의 단계적 축소와 경상경비 절약기조 견지, 방위비 증가율 필요최소수준으로 억제, 이종곡가 차이의 단계적 해소 등 양곡관

리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제의 개혁’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제고시키면서, 소득세제에서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확대, 법인세제에서 조세감면 축소 및 세율인하, 재산세에서 부동산과표 현실화,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 개별 세목에서 다양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먼저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하였으며, 추경편성 억제, 예산집행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정운용 5개년계획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을 밝히는 등 다양한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재정제도 개혁과 재정운영의 실태

위와 같은 재정개혁의 주요과제는 문민정부 기간 대부분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재정개혁의 실태를 보기 전에 조세개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성과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실명제는 「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갑작스럽게 실시하였다. 문민정부는 「계획」 발표 한 달여 만인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공포·시행함으로써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 때 금융실명제 실시로 1997년 3월말 현재 실명전환율이 99.3%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금융실명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보처, 1997b, 45-56, 57-59 참고).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경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될 만큼 문민정부가 강조하는 개혁이지만,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자산소득 인별합산을 가능케 하여 누진·차별의 종합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의 세원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서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 사실 이러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힘입어, 1996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많은 부문의 제도개혁을 이루어내었던 바, 이하에서는 본고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정능력 확충’ 차원에서 특히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1994.11.4. 시행)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교역시장이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뀌면서 취약해진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1994년 3월24일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994년 8월 1일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 31일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을 제정(1994.1.1. 시행)해서 ‘공공자금관리 기금’을 설치하여 연·기금 및 체신예금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하여 부족한 재정투융자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재정지출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계획」에 따른 많은 제도적 정비가 있었지만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으로는 무엇보다 1994년부터 양곡증권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고 양곡수매관리비용을 감축하는 등의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1993년 이래 이루어진 ‘세제개혁’과 관련

해서는 무엇보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96년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며, WTO 체제의 출범 및 OECD 가입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 확충 등을 통해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있었다.

다음으로 ‘재정제도 효율화’와 관련된 개혁으로는 먼저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특히 1995년에는 석유사업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 폐기물관리기금 등을 통합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그동안 주요한 재정투융자 창구역할을 해오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예산비목을 축소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혁이 있었다.<sup>3)</sup>

종합컨대,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재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계획에 부응하게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것은 이와 같은 재정개혁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고자 하였던 “기업활동에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가 제고되어 “신경제”가 의도하였던 사회경제의 구조적 제약의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정책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이하에서 먼저 실제 재정정책 운영의 재정적 성과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3 여기서서는 대표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있는 바, 문민정부 시기 재정개혁에 대한 부문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보처(1997b, 111-128)와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김영삼대통령 주요 정책사료집』, 2023, 502-510)을 참고 바라며, 1993년 이래 1997년까지 연도별 개혁추진 내용은 공보처(『문민정부 5년 개혁백서』, 1997a, 192-203)를 참고 바람.

## (2) 재정정책 운영과 그 재정적 성과

### 1)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이제 위와 같은 재정정책의 기조와 그에 상응하게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난 재정정책 운영의 성과를 살펴보자.

먼저 <표 1>을 보면, 중앙정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통합재정규모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1993년에 16.4%로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1994년 17.2%, 1995년 17.0%, 1996년 17.9%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IMF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1997년의 19.3% 수준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한편 이러한 확장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3저현상’이 소멸한 후 1990년 이래 적자수준을 노정해 오던 것이 1993년에 와서 흑자로 전환된 이래 IMF 경제위기를 맞은 1997년 이전까지는 꾸준히 흑자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정지출의 GDP 대비 상대적 비중이 1993년을 제외하고는 이전 연도들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전 연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의 GDP 대비 상대적 비중이 1993년에 14.6%로 전년에 비해 높아진 이래로 줄곧 15%를 넘는 높은 수준으로 종전에 비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3>).

결과적으로 볼 때 문민정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총량면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애초의 계획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건전기조의 재정정책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세출·세입 구성면에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 2) 세입·세출 구성의 변화추이

먼저 세입 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이 시기에(국세기준) 조세부담률, 즉 GDP 대비 비중은 1991년 13.9%, 1992년 14.3%이던 것이 1993년, 1994년에 14.6%, 14.8%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1995년에는 대폭 높아져서 15.2%, 1996, 15.7%까지 올라갔으며,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1997년 마지막 해에도 15.5%까지 올라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외수입도 1992년 대 GDP 비중이 1.9%이던 것이 1993년 2.1로 올라간 이래로 줄곧 2% 수준을 넘어선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문민정부의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표 3>).

다음으로 세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기능별 분류’의 구성비를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우선 총세출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에 비해 대폭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종전에 비해 그 비중을 높이고 있었던 부문으로는 대표적으로 교육과 경제사업 부문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능별 분류 구성면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그대로 ‘경제적 분류’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표 3>을 보면,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 자본지출의 비중이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 문민정부 첫해 12.1%이던 것이 점차 높아져 1996년에는 19.3%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부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본 재정정책의 기조와 그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재정개혁 조치들에 바탕을 두고 실제로 운영된 재정정책의 성과를 재정규모와 세출·

4 이러한 추세적 변화는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부문(공공부문) 통합재정규모로 보더라도 추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확장재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표 1>과 같은 자료 참고).



세입의 구성 등 총량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제도개혁이 상당 부분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하여 재정운영의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추세적 변화를 보더라도, 여전히 문민정부가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모든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총량적인 규모나 구성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재정운영 과정에서 보인 구체적인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실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특성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 절에서는 앞에서 보인 재정개혁과 총량적인 재정운영의 이면에서 실제로 재정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즉 재정치출과 조세징수 과정에서 생산 주체들의 축적행태 내지 보다 광범하게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 행태에 준 서로 다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정책 운영 내지 그 전달메커니즘에서 보인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1)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운영 실태와 구조적 특성

먼저 문민정부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금융실명제’와 그에 바탕을 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운영과정에 반영된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의 실명확인율이 90%를 넘어 실명제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실명제 실시과정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도록 해둠으로써(「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일반 은행계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모두 실명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계층에게 차등적 특혜가 주어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한달 후인 9월 24일자로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를 발표하여 발표 당시 실명전환 기간 중 인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였던 것을 3천만 원 초과 인출 시에도 국세청 조사를 배제해주며, 무엇보다도 무기명 장기저리채권(산업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최초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금융실명제 처음 출범단계에서부터 실명제 취지를 훼손하는 다양한 예외조치를 두고 있었다(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2000, 462).

한편 이러한 실명제에 바탕을 두고 1996년 1월 1일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하였던 바, 이로써 그때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던 것을 이때부터 부부의 1년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율로 종합과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고 하였지만, 자세히 보면 무엇보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리과세하였으며(당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장기저축상품, 장기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 또는 우대과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80조의2, 「소득세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 이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다(동 법 제129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187조). 이런 조항들을 둔 것은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장기자금조

달 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취해진 예외조치로 보여지나, 장기채권투자자의 상당수가 고소득층인 점을 고려하면 실명제의 취지를 약화시키면서 고소득층을 보호한 측면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1997년 초에 경기가 침체되고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자본유출,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이유로 실명제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명제는 다시금 그 원래 취지가 크게 퇴색하여 고소득계층의 기득권을 지속시키는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7년 12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전면 유보하기에 이르렀다.<sup>5)</sup> 요컨대 간신히 제도화의 터널을 통과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그 실행단계에 이르러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비롯한 개혁조치들의 실상은 기존의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적 특성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였던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산업 및 기업정책에 반영된 재정정책의 구조적 특성

한편, 문민정부는 산업 내지 기업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큰 틀에서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를 지양하면서도 「계획」에 바탕을 두고 「계획적으로」 「신경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경제」를 실행해가기 위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창하면서, 구체적으로 “첨단기술부문의 발전을 위해 ... 재정, 금융 등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대한민국정부, 1993, 167),” “부품, 소재 및 자본재 산업을 중점 육성

해 나갈 것(같은 책, 167),” “기술용역업, 디자인업 등 지식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재정, 금융, 세제 면에서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촉진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같은 책, 169)” 등 정부의 개입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문민정부는 산업 내지 기업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지난날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기와 유사하게 정부가 선정한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경제」를 이루어가겠다는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제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산업 내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 운영과정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었는지를 대표적인 제도적 변화가 갖는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결합의 구조적 특성

1993년 12월 31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1994.1.1. 시행)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운영하였던 바, 동 법 제정 당시 정부는 그 ‘제정이유’를 “연금 및 기금은 공공자금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이 주로 민간금융기관에 예탁·운영됨에 따라 공공부문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원등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재정투융자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석유사업기금, 체신예금 등 거의 모든 공적 여유자금을 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포괄적으로 그 대상을 규정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제5조). 아울러 이

5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 귀속이자분에 대해 1997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96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고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되었다. 이렇게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vol. 2-1, 2012, p. 129).

기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의 재예탁, 국·공채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다(제4조). 말하자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하여 예탁된 기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여 재정투융자 재원과 금융자율화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종래 금융자금으로 수행하던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흡수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공채 인수재원으로 활용하게 하였다(공보처, 1997b, 115).

이와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틀을 만들어 대부분의 주요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모은 다음, 이를 다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예탁·운영하게 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선정한 전략산업 내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원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던 것이다.<sup>6)</sup>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전술한 전략산업 내지 지원대상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초기 투자자본의 크기가 큰 대기업의 주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그를 통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운영은 대기업에 대한 차등적이고 선별적인 지원 도구로 활용되게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등과 기업별 차별적 지원구조

한편 「계획」에 따라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던 바, 전술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제정과 더불어 또 하나 대표적인 조치로 당시 운용되고 있었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광물개발기금’ 등 5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 것

을 들 수 있다.

문민정부는 1994년 3월 24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을 제정(1995.1.1. 시행)하여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투자 또는 보조 등에 세출활동을 하게 하였는데(동 법 제5조), 특히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제6조 제4항)까지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으로 볼 때,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러하지 못한 기업간의 차별적 성장을 유발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한 세출대상 사업들은 주로 대형 공기업이나 재벌계열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점을 고려해보면, 본 특별회계 자금은 주로 대규모 에너지 설비투자 내지 해외자원개발에 차등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종금사의 확장과 재정정책적 지원의 결합의 구조적 특성

금융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문민정부가 「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 중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대표적 개혁조치 중의 하나로는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종합한 소위 단자회사의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로의 전환조치를 들 수 있다.<sup>7)</sup> 먼저 문민정부는 1993년 「계획」에서 “장기적으로는 단자·종금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공동된 업무영역내에서 각사가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금융, 단기금융, 기업금융서비스 업무 등을 선택하여 특화하

6 사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동 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한 1995년에 벌써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 예수액의 24.6%를 차지하던 것이 1996년에는 40.8%, 1997년에는 57.4%로 급속하게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재무부, 『결산개요』 각 연도),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재정투융자활동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록 유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1993, 106), 이어 1994년 4월 “지방단자회사의 종금사 전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단자회사의 종금사 전환과” 서울 소재 단자회사의 처리“ 방침도 발표하고, 이어 7월에는 부산, 대구 등 지방에 본사를 둔 9개 단자회사를 일괄해서 종금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1996년에 서울 소재 단자회사 15개를 한꺼번에 종금사로 전환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 6개에 불과했던 종금사는 1996년 30개로 급증했다.

이렇게 종금사가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신용이 낮은 종금사들이 당시 낮은 국제금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 단기자금을 빌려와서 국내 기업들에 장기시설 자금으로 빌려주고, 기업들로서도 종금사를 통해 은행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중복·과잉투자를 부추기면서 과당경쟁 속에 금융의 부실구조가 깊게 자리잡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더 근원적으로 문민정부 시기 종금사 인허가 확대와 그 운영과정에서도 지난 고도성장시기 이래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 온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구조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1994년과 1996년 종금사로 전환된 많은 단자회사들의 대주주는 상당수 재

벌그룹이었으며, 이들은 종금사를 계열사로 거느리며 이를 통해 자사 그룹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종금사들은 자금을 대주주인 재벌계열사나 관계사에 집중적으로 대출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에서 소외되어 사채시장이나 제2금융권의 힘든 조건에 노출되어 ‘자금조달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기업들간의 생산성의 격차를 낳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존의 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았으나, 종금사는 그러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와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하며 과잉·부실투자를 감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up>8)</sup>

그런데 종금사를 통한 금융상 특혜는 그 자체로 기능을 발휘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조세감면을 비롯한 조세정책, 보조금 내지 정책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정책이라는 정책수단과 맞물려 재벌위주의 과잉투자구조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재벌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과잉투자 경향을 보인 이면에는 무엇보다 조세측면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한 각종 조세우대조치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이뿐만 아니라 자본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확대해준다거나(동법 1995년 8월 4일 개정), 금융기

7 원래 ‘종금사’는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외화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외자도입촉진, 외국의 선진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1975년 12월 31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1976.1.31.)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가 설립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6개 종금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단자회사’로서 ‘투금사’는 제도금융권이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면서 사금융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1972년 「8·3조치」를 통해 사채를 동결하면서 사금융시장을 제도화하여 사채동결·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72년 8월 2일 「상호신용공고법」, 동년 8월 17일 「단기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한 이래, 사채시장이 급속해 냉각되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은 투금사로 예금이 몰려들었고 기업들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금사들을 찾게 되면서 투금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8 이렇게 재벌이 종금사의 대주주가 되어 종금사를 사유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은행법」(제17조의3)에는 1인당 소유지분을 엄격히 제한(당시 4%)하여 재벌의 사유화를 막았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인 종금사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 규모만 정해져 있어 「은행법」과 같은 강력한 주식소유제한 규정이 없었으며, 아울러 여신한도와 관련해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는 엄격한 여신한도 규정이 있었으나, 「은행법」 제30조의 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등)에 비해 그 기준이 매우 느슨했던 탓에 재벌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고 자기 기업의 자금공급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금사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외환위기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종합금융회사 현황(1997년 12월 31일 현재)을 보면, 주요 주주가 대우, 현대, 한진, 한화(김승연 외), 엘지, 금호, 쌍용, 신세계백화점 그룹 등 당시 대재벌 그룹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종금협회, 「종합금융회사 현황 및 통계」, 1997.12.31.(최두열·이연호, “금융감독과 외환위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경제연구학회」, 8권, 2002의 <부표>를 참고).



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동법 1997년 8월 30일 및 1997년 12월 13일 개정 등). 이외에도 재정지출면에서는 전술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바탕을 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서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을 들 수 있는데, 이 자금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전력산업 내지 기간산업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대부분 재벌 계열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투융자를 비롯한 재정지출이 행해지고 조세감면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부담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차별적 혜택을 쫓는 경제행태가 유인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이고 차등적 특혜(지대) 추구적 재정정책이 수행된데 더하여 보다 부실한 구조로 점철된 전술한 중금사의 단기외채에 의한 무분별한 융자가 더해지면서 단기적 차익을 쫓는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과잉·부실투자로 몰아가게 했던 것은 논리적으로는 물론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 3. 사회경제적 귀결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민정부는 1992년 저조한 성장세를 극복하여 1994년에는 수출과 투자증가에 힘입어 실질경제성장률이 9% 가까이 올라가는 성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 모두 다소 기복은 있어도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날 경제발전과정에서

지난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지가상승률은 199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어서 1993년에는 큰 폭의 하락율을 보이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안정기반 위에서 성장을 이어가던 우리 경제는 1996년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이고 투자율도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거시경제적 성과의 이면에서는 재정정책이 운영되면서 국민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그러한 재정정책의 총량적 성과는 ‘3저 현상’ 소멸 이후 이어지고 있었던 재정적자 상태를 극복하고 균형재정상태를 보이면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총량적 재정성과만으로는 총량적인 경제성과도 가능하기 어렵지만 더구나 그러한 총량적 성과 이면에서 서로 다른 계층 내지 부문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 제 계층과 부문에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귀착되는지를 파악해내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앞 절에서 그러한 총량적 재정정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이 행해지고 조세수입이 징수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에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해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 우리는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재정지출과 조세징수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앞에서는 밝히고 있듯이 지난 고도성장기의

9 특히 법 제27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0%)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절감해주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1996년 12월30일 개정(1997.1.1.시행)에서 국산기자재 사용 단서를 없애고 모두 10% 범위 내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을 두고 운용하고 있었다.

10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의 ‘주요경제지표’ 및 ‘국민계정’ 관련 부분 참고. 아울러 지가상승률 관련 자료는 장상환, “해방후 한국자본주의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2004년 2월호, <표1> 참고.

불균형성장정책 하에서 오랜 기간 자리잡아온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전략)’이 여전히 다양하게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등적·선별적 지원정책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책구조 하에서 특권적 편익을 좇아 행동하는 ‘지대추구적 비생산적 축적행태’를 유인하게 되어 있음은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하에서는 문민정부 시기 재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전술한 주요정책들이 야기한 비생산적 경제행태가 낳은 현실 사회경제의 구조적 실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 (1) 경제 제 부문 간의 불균등 발전구조의 심화

앞에서 살펴본 재정정책운영에서의 첨단기술 부문, 부품, 소재 및 자본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우호적인 차등적·선별적 지원구조나 우르과이라운드, WTO 체제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업종 간에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은 대내적인 정책운영이나 대외적인 경쟁질서로의 편입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조치 등은 전반적으로 지난날 고도성장기 불균형성장정책 추진 이래 나타나고 있었던 산업별 불균형성장 추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계정’상의 ‘경제성장률’과 ‘업종별성장률’을 대비해 보면(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의 ‘주요경제지표’ 참고), 제조업을 포함한 비농림어업은 전체 경제성장의 추세를 넘어서는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림어업부문은 전체 성장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오르내림의 진폭이 커서 불안정한 성장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업종별 종사 부문에 따라 관련된 제 계층들 간의 관계를 취약하게 만

드는 계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생산활동과 그 성과 면에서 대·중소기업 간에 나타나고 있는 불균등발전의 양상도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먼저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을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2.2%, 문민정부 첫해인 1993년 41.9%였던 것이 마지막 1997년 33.0%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 숙련도도 낮고 자본축적 정도라든지 생산과정의 결합방식 등의 면에서 생산성과를 발휘해낼 수 있는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점점 취약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유사한 맥락이지만 또 다른 지표로서 ‘노동장비율’에 나타난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등 발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표값을 보면, 1990년 중소기업의 노동장비율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42.3%에 해당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1993에는 36.5%, 그리고 마지막 1997년에는 34.3%로 그 성과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1)</sup>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점점 더 취약한 설비자산을 가지고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성과가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창하면서 재정, 금융, 세제면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산업들이 ‘첨단기술’, ‘부품, 소재 및 자본재 산업’, ‘지식관련 서비스업’ 등으로서, 이들 산업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장비와 고도의 작업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상대적 지위가 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다

11 정연승·성백남·이원영,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04-94, 중소기업연구원, 2004, <부표6>, <부표8>, <부표9> 참고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처한 여건이 이렇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계층이나 제 부문 간의 격차 내지 구분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경제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2) 과잉투자와 과잉부채로 인한 부실기업화의 진전

앞에서 문민정부는 한편으로는 대내적으로 금융자유화와 대외적으로 자본자유화를 광범하게 취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정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조세감면조치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갔음을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첨단기술부문’, ‘부품, 소재 및 자본재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초기에 큰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서 대부분 대기업의 사업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차등적인 재정정책적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가 풀린 금융시장에서 보다 많은 융자를 통해 보다 많은 단기적 이득을 취하는 경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한편으로 자유, 다른 한편으로 특혜가 합쳐지면서 부채의존구조, 특히 단기 외채구조가 형성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유화 정책기조 하에서 앞에서 본 “단자사의 종금사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여신이 보다 자유로와졌으며, 그러한 종금사들의 대출경쟁 과정에서 해외에서 도입한 단기자금에 의한 대출과 이에 바탕을 둔 기업의 고부채에 기반한 과잉투자 등으로 정책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당시에 종금사로 전환된 많은 단자회사들의 대주주가 주로 재벌그룹이어서

(각주 8) 현실적으로 종금사가 재벌 대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활용됨으로써 종금사 확장은 종금사에 접근이 용이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당시 특정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행해진 재정정책상 우대 조치들과 맞물려 대기업 위주의 과잉투자구조가 심화되는 메커니즘이 하나의 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도 보았다.

관련 통계를 보면, 1994년 이래 전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0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단기부채비율이나 해외부채비율 모두에서 ‘기타 기업’에 비해 상당한 수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해외부채비율은 ‘5대기업집단기업’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 수준을 훨씬 넘어 서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 다다른 현실적 이유는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외채에 그 주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근원적인 원인이 당시 취했던 금융자유화와 종금사의 확대,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맞물려 차등적·선별적 시혜구조로 운영되었던 재정정책운영의 구조적 특성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고도성장기의 사회경제구조의 왜곡은 문민정부 하의 개혁정책 하에서도 지양되지 못한채 현상적으로 IMF 경제위기 상태로까지 귀결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가며: 종합적 평가와 시사점

본고는 먼저 오랜 기간 군사정권의 막을 내리고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건설을 외치면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건설을 기치로 「계획」을 구상·수립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는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개혁’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그러한 「계획」에서 내세웠던 재정개혁은 대부분 「계획」에 부응하게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제도개혁에 부응하여 재정정책에서 건전재정을 기본기조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총량면에서 재정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조세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서 재정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서 건전재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출구성면에서는 국방비 비중이 낮아진 대신 교육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량적 재정규모 내지 재정수지면의 정책기조 이행여부나 재정지출 구성면의 추이만으로는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민간의 제 부문에 어떻게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각종 제도와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정정책 수단이 민간경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세출과 세입 측면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고는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 경제정의 등을 기치로 신경제를 통한 신한국 건설이라는 명분에 상응하는 재정개혁조치들을 수행해나갔으나, 실제로 그러한 정책이 이질적인 민간의 제 부문

에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날 군사정부가 고도성장기에 구사하였던 ‘차등적·선별적인 지원정책’ 틀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으며, 결국 기업을 비롯한 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역사적 유제인 ‘지대추구적인 비생산적 축적행태’를 지양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총량적 측면에서 초기의 적지 않은 양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과잉투자와 과잉부채로 인한 부실기업 문제를 불러오고 경제 제부문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더 왜곡·파편화시킴으로써, 정권 말기에 ‘IMF 경제위기’ 사태를 불러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문민정부 하의 우리 기업은 현상적으로는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로부터 단기적으로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채무의존적 기업의 재무행태, 더 나아가 단기외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종국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위기적 상황으로까지 내몰게 된 것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와 같은 정책 전달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 배경으로서 재정정책을 비롯한 ‘차등적·선별적’인 정책적 지원구조로 인해 생산주체로 하여금 ‘지대추구적 비생산적 축적양식(행태)’에 의지하게 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생산적 경제행태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개혁정책 수행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판단된다.

12 김창배·홍재범,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기업의 부채구조와 결정요인,” 연구 04-17, 한국경제연구원, 2004, 28 참고. 특히, 단기외채는 1994년 38,450, 1995년 54,856, 1996년 75,886, 1997년 63,758백만달러였는데, 외환보유고는 각 연도 25,673, 32,712, 33,237, 20,405 백만달러의 실적을 보여 단기외채 규모를 크게 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이제민, “한국의 외환위기,” 『경제발전연구』 13(2), 2007, 9 참고)

&lt;표 1&gt; 중앙정부 통합재정

(단위: 억 원, %)

| 구분   | 지출 및 순융자  | 수입      | 수지차      | GDP       | 실질 경제성장률 | 재정규모(대 GDP) | 통합재정수지 |
|------|-----------|---------|----------|-----------|----------|-------------|--------|
| 1990 | 332,961   | 320,893 | -12,068  | 1,913,830 | 9.3      | 17.4        | -0.6   |
| 1991 | 403,115   | 368,175 | -34,940  | 2,314,280 | 9.7      | 17.4        | -1.5   |
| 1992 | 449,934   | 438,056 | -11,878  | 2,639,930 | 5.8      | 17.0        | -0.4   |
| 1993 | 490,467   | 507,509 | 17,042   | 2,987,620 | 6.3      | 16.4        | 0.6    |
| 1994 | 601,254   | 611,096 | 9,842    | 3,499,730 | 8.8      | 17.2        | 0.3    |
| 1995 | 698,042   | 719,201 | 21,159   | 4,096,540 | 8.9      | 17.0        | 0.5    |
| 1996 | 824,242   | 841,867 | 17,625   | 4,609,530 | 7.2      | 17.9        | 0.4    |
| 1997 | 977,269   | 919,794 | -57,475  | 5,063,140 | 5.8      | 19.3        | -1.1   |
| 1998 | 1,124,350 | 954,821 | -169,529 | 5,010,270 | -5.7     | 22.4        | -3.4   |

자료 재정경제원, 『한국통합재정수지』 1995, 2002 및 2005년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10년판

&lt;표 2&gt;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단위: 억 원, %)

| 구분   |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                   |        |                   |                |                   |              |              |                   |              |
|------|-----------------|-------------------|--------|-------------------|----------------|-------------------|--------------|--------------|-------------------|--------------|
|      | 일반<br>공공행정      | 국방                | 공공질서안전 | 교육                | 보건             | 사회보장<br>및 복지      | 주택건설<br>지역개발 | 기타지역<br>사회사업 | 경제사업              | 분류불능<br>기타목적 |
| 1990 | 28,239          | 66,732<br>(20.0)  |        | 56,488<br>(17.0)  | 5,686<br>(1.7) | 26,912<br>(8.1)   | 33,790       | 1,649        | 67,890<br>(20.4)  | 45,576       |
| 1991 | 35,629          | 78,996<br>(19.6)  |        | 56,088<br>(13.9)  | 7,162<br>(1.8) | 34,382<br>(8.5)   | 37,093       | 2,096        | 83,328<br>(20.7)  | 68,340       |
| 1992 | 43,971          | 87,035<br>(19.3)  |        | 64,919<br>(14.4)  | 4,229<br>(0.9) | 41,667<br>(9.3)   | 32,323       | 2,468        | 84,272<br>(18.7)  | 89,049       |
| 1993 | 46,859          | 90,407<br>(18.4)  |        | 96,451<br>(19.7)  | 4,383<br>(0.9) | 45,768<br>(9.3)   | 30,475       | 2,799        | 97,449<br>(19.9)  | 75,873       |
| 1994 | 57,454          | 100,555<br>(16.7) |        | 109,717<br>(18.2) | 3,664<br>(0.6) | 59,317<br>(9.9)   | 42,889       | 4,283        | 135,208<br>(22.5) | 88,167       |
|      | 일반<br>공공행정      | 국방                | 공공질서안전 | 교육                | 보건             | 사회보장<br>및 복지      | 주택건설<br>지역개발 | 오락문화종교       | 경제사업              | 주분류외지출       |
| 1995 | 30,020          | 111,246<br>(15.7) | 39,305 | 127,653<br>(18.0) | 5,121<br>(0.7) | 63,617<br>(9.0)   | 56,905       | 4,230        | 176,762<br>(24.9) | 95,462       |
| 1996 | 33,749          | 125,530<br>(15.0) | 44,720 | 144,353<br>(17.2) | 6,820<br>(0.8) | 78,842<br>(9.4)   | 70,774       | 5,338        | 219,649<br>(26.2) | 108,635      |
| 1997 | 42,492          | 131,595<br>(13.3) | 47,893 | 162,488<br>(16.4) | 7,771<br>(0.8) | 96,314<br>(9.7)   | 66,767       | 6,790        | 243,335<br>(24.5) | 186,053      |
| 1998 | 49,936          | 136,206<br>(12.1) | 53,811 | 167,301<br>(14.9) | 9,573<br>(0.9) | 122,522<br>(10.9) | 70,475       | 7,877        | 302,450<br>(26.9) | 204,199      |
|      |                 |                   |        |                   |                |                   |              |              |                   | 1,124,350    |

주1 ( )안의 수치는 총세출 및 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2 1995년에 있었던 '기능별 분류'의 항목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임

자료 위와 같음.

&lt;표 3&gt;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와 총세입의 경제적 분류

(단위: 억 원, %)

| 구분   | 세출 및 순융자 기능별 분류 |               |           |         |             |                     |              |        |         |
|------|-----------------|---------------|-----------|---------|-------------|---------------------|--------------|--------|---------|
|      | 세출 및 순융자 경제적 분류 |               |           |         |             | 총세입의 경제적 분류         |              |        |         |
|      | 총세출             |               | 총세출<br>합계 | 순융자     | 세출 및<br>순융자 | 경상수입                |              | 자본수입   | 총세입     |
|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             | 조세수입                | 세외수입         |        |         |
| 1990 | 246,481         | 43,559(13.1)  | 290,040   | 42,922  | 332,962     | 283,626(88.4)[14.8] | 29,697[1.6]  | 7,569  | 320,892 |
| 1991 | 299,676         | 56,512(14.0)  | 356,188   | 46,927  | 403,115     | 321,955(87.4)[13.9] | 37,516[1.6]  | 8,704  | 368,175 |
| 1992 | 354,352         | 53,408(11.9)  | 407,760   | 42,174  | 449,934     | 377,514(86.2)[14.3] | 51,191[1.9]  | 9,352  | 438,057 |
| 1993 | 390,822         | 59,481(12.1)  | 450,104   | 40,363  | 490,467     | 435,479(85.8)[14.6] | 62,865[2.1]  | 9,165  | 507,509 |
| 1994 | 457,166         | 81,703(13.6)  | 538,869   | 62,385  | 601,254     | 518,368(84.8)[14.8] | 78,883[2.3]  | 13,845 | 611,096 |
| 1995 | 490,607         | 120,117(17.2) | 610,724   | 87,318  | 698,042     | 622,098(86.5)[15.2] | 84,853[2.1]  | 12,250 | 719,201 |
| 1996 | 554,291         | 158,872(19.3) | 713,163   | 111,079 | 824,242     | 723,856(86.0)[15.7] | 104,996[2.3] | 13,015 | 841,867 |
| 1997 | 618,960         | 171,078(17.5) | 790,038   | 187,231 | 977,269     | 784,338(85.3)[15.5] | 123,062[2.4] | 12,394 | 919,794 |
| 1998 | 695,253         | 184,692(16.4) | 879,945   | 244,405 | 1,124,350   | 783,100(82.0)[15.6] | 163,238[3.3] | 8,483  | 954,821 |

주1 자본지출의 ( )안의 수치는 총세출 및 순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2 조세수입의 ( )안의 수치는 총세입 대비 비중이며, [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위와 같음.

# 재정지출의 방향을 읽다

돈은 어디로 흐르고,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왜, 어떻게 쓰느냐이다. 국익 중심의 산업 육성과 복지안전망 확충이라는 세 가지 방향 속에서,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약을 고려한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 경쟁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기회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를 판단하는 냉정한 시각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 급변하는 글로벌 위기와 재정의 선택

오늘날 글로벌 사회는 전쟁과 공급망 불안, 통상 갈등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까지 격화되면서 국제경제는 다시 큰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급의 불안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생산비와 물류비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무역 위축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휘발유를 비롯한 원유 관련 제품의 수급 불안도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 결과 투자와 고용은 위축되고,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각국은 경제와 민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단이

재정이다. 정부는 위기 국면에서 재정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경기 둔화를 완충하려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본래 조세를 통해 조달하고, 확보된 세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최근 여러 나라들은 이 원칙을 넘어 정부지출을 크게 늘려 왔고, 부족한 재원은 국가채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재정을 통한 정부 역할 확대에도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확장재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 감염병, 저출생, 고령화,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재정 수요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둘째는 정치적 이

유다. 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재정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기에 재정만큼 손쉬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재정 확대 욕구에는 본질적으로 제약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제정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으로 도전받는 재정 :

#### 재정확대의 유혹

현대의 재정정책은 더 이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소극적인 경기조절 수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재정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특정 복지정책을 수행하며, 경제구조 자체를 유도하는 적극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형식상으로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실제 정책 운용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확대가 과연 시장의 역동성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는지, 아니면 민간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있다.

민간 의존보다 국가 의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이 확대되는 데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쉬워졌다. 복지와 산업, 고용과 지역균형을 모두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재정은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기능보다 국가 기능을 앞세우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세 수입 증가율보다 국가예산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 왔다. 이

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권이 재정을 통해 경제와 복지를 주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재정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재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출이 미래 성장과 국가경쟁력, 사회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는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재정의 핵심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배분에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는 국익 중심의 재정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할수록 각국은 자국 산업과 자국 공급망, 자국 고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둘째는 산업 육성의 재정이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우주항공,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는 복지안전망을 위한 재정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취약계층 보호, 돌봄 수요 확대 등은 복지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역할이 경기 대응을 넘어 시장 조성자, 산업 설계자, 복지 관리자 역할까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한 위험도 내포한다. 재정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보다 비효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은 특정 목적과 일시적 위기 대응에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항구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재정은 시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세수보다 지출을 앞세우는 재정 : 국가채무의 압박

세수보다 정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확대의 가장 큰 제약은 국가채무다.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규모는 2026년 728조 원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6년



386조 원과 비교하면 약 1.9배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국제 징수액은 242조 원에서 390조 원으로 약 1.6배, 국내총생산(GDP)은 1,740조 원에서 약 2,743조 원으로 약 1.6배 늘었다. 반면 국가채무는 626조 원에서 약 1,300조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51%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규모와 세수는 증가했지만, 국가예산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고, 그 차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 재정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재정 확대를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다. 2020년 팬데믹 위기를 비롯해 경기 침체, 복지 수요의 급증,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확대가 일시적 대응을 넘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 없이 확대재정이 반복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간 부문의 성장과 비교해 보아도 재정 증가 속도는 빠르다.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6년 201조 원에서 2025년 333조 원으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2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었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의 매출액은 3,667조 원, 당기순이익은 136조 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각각 5,634조 원과 19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업도 성장했지만, 국가재정의 팽창 속도는 이보다 더 가팔랐다. 결국 지난 10년의 재정 추세는 양적 팽창 중심의 확대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지출 확대보다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세수 기반의 확충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이 위기 대응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재정 건전성을 유

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위기 국면에서 국가가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 ‘국익 중심의 재정’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최근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의 군사 충돌, 미국-중국 통상 갈등, 보호주의적 관세장벽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한다. 대외 수요가 흔들리면 수출이 둔화되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며, 그에 따라 세수도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정부는 산업 지원과 에너지 보조, 공급망 안정화,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추가 지출 압력을 받게 된다. 즉, 세입은 흔들리고 세출은 늘어나는 이중 부담이 재정에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교역국의 관세 강화는 우리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기업 실적 악화와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재정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국익 중심의 재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전략산업 방어를 위한 실질적 재정 전략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 대한 시설투자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 확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 방산 역량 강화, 에너지 비축체계 확충 등은 국익 중심 재정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외부의 전쟁과 갈등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방산과 첨단 제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자동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의 다변화와 지출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 ‘산업 육성의 재정’ : AI와 기술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최근 국가예산은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 전환도 함께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단기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최근에는 연구개발(R&D), 산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예산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재정이 단순한 소비성 지출을 넘어 미래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위성통신,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은 개별 기업만으로 선도하기 어려운 분야다.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는 재정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

다만 산업 육성의 재정이 성공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일회성 보조금보다 연구개발 생태계, 인력 양성, 제도 개선과 연계된 패키지 전략이어야 한다. 또한 성과 검증과 일몰 관리도 분명해야 한다. 재정 지원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고착되면 그것은 육성이 아니라 왜곡이다.

한편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AI의 확산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일부 직무의 대체와 숙련 격차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보다 인적 자본 고도화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대학과 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첨단산업 연계 교육, 재직자 재교육, 직무 전환 지원 등은 향후 재정투자의 핵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투입은 기

업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 결국, 재정은 규모와 속도보다 방향이다

오늘날 재정은 더 이상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역할이 커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규모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에, 왜,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재정투입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도 안된다. 재정은 적절한 규모와 속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투입하느냐는 재정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익 중심의 재정은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고, 산업 육성의 재정은 미래 성장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복지안전망을 위한 재정은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은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약 조건 안에서 조율되어야 한다. 세금과 재정지출은 무한하지 않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은 더욱 전략적이어야 한다.

결국 좋은 재정은 많이 신속히 쓰는 재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익과 성장, 복지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정교하게 쓰는 재정이 좋은 재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의 속도 경쟁이 아니라, 재정 배분의 방향성과 품질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 항목을 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어디에서 만지고 있는지를 읽는 일이다.

#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왕조 다시 보기(1)

한 사회나 집단을 이해하는 데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개인의 살림살이야 재정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 하에 사회활동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지출하는 경제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세입이 어떠한 경로로 마련되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며 어떠한 목적 하에 지출되는지는 곧 그 사회 혹은 집단의 성격을 결정짓는 지문과도 같다.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조선왕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재정’을 중요하게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왕조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실학’이나 ‘상업자본’과 같은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조선왕조의 장기지속 그 자체를 국가적 역량으로 보고, 왕조를 유지하는 경제원리로서 ‘재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조선왕조는 왜 두 차례의 국제전과 17세기 대기근을 겪고서도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조선왕조는 유교적 민본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내적 모순과 위기 요인을 꾸준히 개선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특히 재정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재원의 과다한 수취를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였으며 지출과 배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조지프 슈페터가 말하는 ‘조세국가(Tax State)’를 넘어, 수입과 지출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정국가(Fiscal State)의 면모를 점진적으로 갖추

어 나갔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조선왕조가 어떻게 고려와 차원이 다른 국가로 변모해가는지 재정의 중앙집권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 재정의 중앙집권화 과정, 그 첫 단계 - 과전법을 시행하다

고려와 조선왕조의 수취제도는 기본적으로 토지세와 공물, 역(요역·군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고려 말에 상요(常徭)와 잡공(雜貢)이 늘고,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면서 전시과제도가 형해화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곧 수취제도 전반이 문란해졌음을 뜻한다. 공양왕대 조준(趙浚, 1346~1405)이 전제개혁안을 제시하고 과전법을 추진한 이유도 이러한 재정 문란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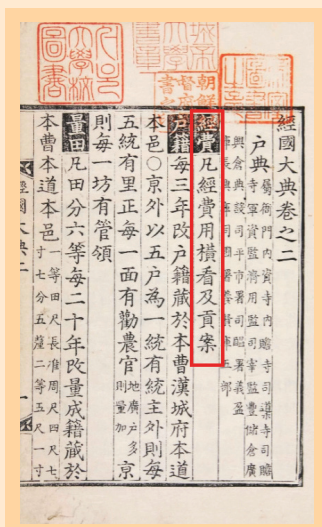
과전법은 간략히 말하자면, 왕실,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私田: 개인이 세금을 거두는 토지)를 경기 지역으로 제한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국가가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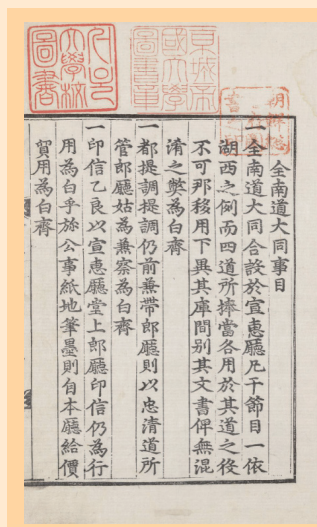
01



02



03



04

01 이원익(李元翼)은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선헌법을 광해군에게 처음 건의한

인물이다.(출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02 <탐라순력도>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화공

김남길(金南吉)을 시켜 제작한

기록화첩으로 제주관아에서 감골을

봉진하기 위해 선별, 포장 작업을 거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출처:

제주화 이카이브)

03 <경국대전> 호전 경비조,

(출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04 <전남도대동사목>

(출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에게 직접 수세함으로써 국가수조지(公田: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토지)를 늘려 놓은 제도이다. 전시과제도에서처럼 18과로 등급을 나누어 수조지를 분급하되, 이를 경기지역으로 제한해 왕실, 관료 집단이 지방에서 마음대로 수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은, 토지의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어 상급 토지의 생산량을 1결당 벼(잡곡) 300두로 잡고, 최대 30두를 과세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권문세족과 사원이 불법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변정해 공전과 공노비도 추가로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왕조는 이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을 통해 새 왕조 개창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 왕조의 백성들에게 조선 건국의 명분을 얻어냈다. 그러나 과전법은 애초에 국가수조지를 늘리려는 차원에서 기획되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는 왕실, 관료에게 나누어줄 과전이 갈수록 줄어들자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거나 정부에서 토지세를 거둬 왕실, 관료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과전법의 운영을 축소해갔다. 명종대에는 이마저도 한계에 달해 과전법 체제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양반 관료들이 조정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녹봉이 전부였던 반면, 정부가 수세할 수 있는 토지 규모는 고려 말 전제 개혁 당시 50만 결로 파악되던 것에서 세종대 163만 결 수준으로 늘어났다.

### 재정의 중앙집권화 과정 - 세입과 세출구조를 확립하다

조선왕조의 재정구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수취제도는 ‘공물’이다. 공물은 조선왕조의 재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실과 정부관서의 경비에 대부분 이 공물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왕실과 정부관서에서는 공안[貢案: 공물장부]을 토대로 각읍에서 경비물자를 조달하였으며, 왕실

의 경우 품질 좋은 특산품을 진상물로 확보하였다. 이것을 소위 ‘공납제(貢納制)’라 한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후 4개월 만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고려의 공안을 정비하도록 했으며, 태종 1년(1401)에도 공물 수를 다시 한번 조정했다. 그러나 태종대 개정된 공안은 중앙관서의 공물을 과하게 책정해 조정이 필요했다. 세종대에도 중앙에 조달되는 공물수가 늘어 공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공물은 왕실과 정부관서의 살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종대에는 공안개정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지만, 재정 면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하나는 지리지의 편찬이고, 다른 하나는 횡간의 제정이다. 세종은 재위 당시 전국 단위 지리지 편찬을 추진했는데, 이는 세종 사후 『세종실록지리지』로 간행되었다. 이 지리지에는 군현별 토의(土宜)·토산(土產)·토공(土貢)은 물론, 약재 진상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칙 하에 330여 개의 고을에서 수취 가능한 공물과 진상을 데이터화해 놓은 것이다. 또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재위 28년(1446)부터는 지출레인 횡간을 작성하였다. 현물재정 하에서 왕실과 정부관서의 지출항목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징수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횡간은 세조대를 거쳐 성종 5년(1474) 횡간식례(橫看式例)로 최종 정비되었으며, 『경국대전』 상에 ‘무릇 경비는 횡간과 공안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성문화되었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토지세와 공물제도의 정비로 세입을 꾸준히 확대해갔으며, 횡간식례의 제정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통제하여 애민절용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문제는, 세조대와 성종대 공안개정을 통해 공물 수를 대폭 줄여놓았으나 연산군대 다양한 추가징수 조항이 마련돼 재정문란이 야

기된 점이다. 또 공물수취 과정에서 점퇴(點退: 공물에 퇴짜를 놓는 행위)와 방납(防納: 비싼 값을 받고 공물을 대신 바치는 행위), 추가징수와 같은 폐단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현물재정 하에서 공안과 횡간에 근거한 중앙의 세입, 세출 관리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방재정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가 더욱 소홀했다. 『경국대전』 호전의 회계조에, ‘무릇 (경비)물자는 매 계절 말에 회계하여 아뢴다.’고 하였으나 애초에 예산을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수령의 자의적 수취와 집행은 막을 수 없는 문제였다. 물론 관아와 객사를 운영하는 데 쓰도록 관둔전(官屯田)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수령은 고을 백성들에게 과외의 현물과 요역을 수시로 부과했다. ‘대동법(大同法)’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입-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의성을 해소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제도이다.

### 재정의 중앙집권화 과정 - 지방의 예산제도를 확립하다

흔히 대동법은 공납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물을 토지세로 전환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동법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대동사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중앙보다 지방에 할당된 대동세가 더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남도대동사목』의 9조항을 살펴보면, 169,771결의 토지에서 쌀 13두를 거두면 147,134석이 되는데, 이중 서울로 올려보내는 쌀(경상납미)은 61,218석으로, 본도에 유치하는 쌀(대동유치미)은 85,916석으로 산정해 놓았다. 충청도의 경우 경상납미가 조금 더 많게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상도의 경우는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대동유치미가 경상납미보다 많게 책정되었다. 둘째, 중앙의 공물보다 지방 행정에 쓰이는 공물, 역가(役價: 고용비)의 지출

규정이 훨씬 자세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동법은 중앙의 공물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기획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대동법은 현물재정의 피로도가 높은 지방민들에게 중앙에 바칠 공물을 쌀로 전환해주는 시혜적 조치인 동시에, 감사와 수령이 지방재정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동세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지방재정으로 할애한 것이다.

물론 대동법이 전국에 시행되는 18세기 이후 지방재정의 또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예산을 파악하고 회계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어디까지나 대동법의 역할이 컸다.

대동법의 또 하나 중요한 의의는 부세제도의 개혁에 지방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이다. 광해군 즉위년(1608)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을 위시한 조정 관료들의 건의로 경기선혜법이 처음 시행되었지만, 이후 강원도에서는 지역민(士民)들이 나서서 대동법 시행을 적극 요청하였다. 이에 인조반정 직후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에도 대동법이 시행되었다(1623). 전라도 내륙 산군의 경우 양반 지주를 중심으로 대동법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 폐지를 반복했으나, 대동법 폐지 후 백성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결국 현종 7년(1666) 전라도 대동법이 최종 시행되었다. 이처럼 대동법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제도를 성립시킨 획기적인 재정 조치였으며, 한 세기 동안 중앙과 지방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구축한 제도였다.

문제는 18세기 들어서 대동법이 또다른 재정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음 호에는 대동법 시행이 야기한 재정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조선왕조가 어떻게 대응책을 모색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자원 배분과 재정 효율성

국가 비전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재정이라는 현실 위에서 구체화된다.

김유신이 보여준 선택과 원칙은, 삼한 통합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그의 삶의 철학과 국가관을 통해, 국가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 ‘효율’의 본질을 살펴본다.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       |                                      |
|-------|--------------------------------------|
| 이름    | 김유신(金庾信)                             |
| 생물연도  | 595년(진평왕 건복 12년)~673년(문무왕 13년) 7월 1일 |
| 국적    | 신라                                   |
| 관직    | 태대각간, 대장군                            |
| 시호    | 흥무대왕(興武大王)                           |
| 본관/성씨 | 김해김씨(金海金氏)                           |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천년을 이어온 화랑의 숨결, 하나 된 한반도의 등불로  
영원히 빛나시길 바랍니다.”



## 서언

신라가 삼한을 통합하지 않았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 당시 신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삼국 간에는 민족적 동질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언제 국가 전체가 사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위기국면이 당시 삼국이 처한 국제상황이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바로 죽음이고 노예적 삶에로의 추락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삼국 간에 무수히 벌어졌던 전쟁에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하고 흔한 일이었다.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고구려, 백제의 내부 상황으로 볼 때 중국에 의해 완전히 복속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립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한때 큰 제국을 형성했던 선비족-거란족-여란족-돌궐족 등등과 같이 중국의 변방 민족으로 전락하였을 것으로 확신된다. 이런 점에서 김춘추(태종무열왕)-김법민(문무왕)-김유신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세 영웅에 의한 삼국통일은<sup>1)</sup>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업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삼국통일의 요인으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김유신 장군의 삼한통합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철학을 통한 국가운영에 관한 국가관을 살펴보고 실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김유신의 삶의 철학과 국가운영에 관한 국가관

신라의 삼한통합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우선 642년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사위 품석과 함께 백제군에 의해 너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다. 고타소의 비참한 죽음은 김춘추로 하여금 분노심을 불러일으켜 삼한통합에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2)</sup> 다음으로 삼한통합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호국의 영웅인 김유신의 존재다. 김유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삼한통합은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연 김유신은 어떤 세계관 즉 삶의 철학과 국가관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철학과 국가관은 당시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자원 배분과 재정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사실 신라의 삼한통합을 삼국통일이라는 명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광활한 요동지역의 영토를 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고구려의 옛 영토 수복에 대한 염원은 비원으로 남아있다.

2 고타소의 죽음으로 인한 김춘추의 분노에 대해서는 정경환, "[김유신 공부 003] 김유신, 죽어서도 나라의 호국신이 되다," <https://blog.naver.com/cw3581/224255180329> 참조.

김유신은 첫째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도 오직 국가의 보위와 존속만을 생각했다. 673년 그의 나이 79세에 중한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문무왕이 직접 위문을 와서 “과인에게 경이 있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社稷]는 어떻게 하는가?”라면서<sup>3)</sup>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말을 듣고 김유신은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을 하게 된다. “신은 어리석고 못났으니, 어찌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 나라[基業]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신다면, 신은 죽어도 또한 여한이 없겠습니다.”<sup>4)</sup> 그의 충군애국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충군애국의 철학은 개인적 충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군주에 대한 충성은 곧 국가 질서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이다. 둘째, 그는 공명정대한 삶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는 “대인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는<sup>5)</sup> 대인무사(大人無私)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의 공명정대함의 철학에 대한 실천은 무수히 많다. 많은 관직에의 청탁을 받았지만 다 거절하였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귀국하자마자 다시 침략을 당하자 바로 집을 지나가면서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개인의 안위나 가족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그의 삶의 철학은 용기에 기초하고 있다. 용기는 우선 그 어떤 시련, 아픔,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준다. 또한 용기는 반드시 고통 속에서 발생하는데 용기는 그 고통을 넘어 미래 창조의 거름이 된다. 그리고 용기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김유신의 이러한 용기의 철학은 자신의 사상과 전략을 현실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힘이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일반 병사들이 주저하는 어려운 일을 몸소 먼저 실천해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그가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열사(烈士)의 뜻이다.”<sup>6)</sup>고 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철학은 의리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국가나 사람관계에서 단심(丹心)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김춘추와의 의리는 역사에 길이 남아 있는 의리의 표상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김춘추를 지켰고 마침내 김춘추를 왕위에 앉혔다. 결국 두 사람의 의리심이 결합되어 삼한통합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의리를 통해 조직을 결속시켰다. 군대는 단순한 병력의 집합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공동체이다. 의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다. 김유신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분열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하였다.

3 『삼국사기』 권 제43, 열전 제3, 김유신(金庾信) 하(진한 글씨는 필자의 강조내용임). 大王泣曰, “寡人之有卿, 如魚有水, 若有不可諱, 其如人民何, 其如社稷何.”

4 『삼국사기』 권 제43, 열전 제3, 김유신(金庾信) 하(진한 글씨는 필자의 강조내용임). 庾信對曰, “臣愚不肖, 豈能有益於國家. … 基業無窮, 則臣死且無憾.”

5 『화랑세기』 15세 유신공 편.

6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金庾信) 상. 見危致命, 臨難忘身者, 烈士之志

이외에도 그는 지조와 절제, 정직, 겸손 등등의 삶의 철학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이러한 삶의 철학을 기초로 그는 나와 국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나와 국가의 일체라는 국가관, 국가에 대해 헌신한다는 멸사구국의 국가관, 개인적 이익과 영달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한다는 선공후사의 국가관, 나라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 삼국을 통합한다는 삼한통합의 국가관 등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었다.



길상사는 김유신을 모시는 사당이다. 길상사의 주 건물은 김유신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홍무전이다.

###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자원 배분과 재정 효율성

국가 비전 실현과 재정은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재정은 단순히 나라의 살림살이가 아니다. 재정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국가는 단순히 영웅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자원의 배분과 재정의 효율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국가다. 재정의 낭비,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은 단순히 재정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일이 된다.

국가는 나름의 비전을 지니고 있고 비전 실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국가가 지녀야 할 재정의 효율성 문제는 김유신의 세계관과 국가관과 연계해서 설명하면 분명한 결론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공후사의 자원배분이라는 재정의 원칙이 요구된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선공후사였던 것이다. 그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이념적 기준에 의한 재정의 집행은 결코 선공후사적 재정집행이 아니다.

다음으로 국가라고 하는 전체적 차원에서 재정의 집행이 요구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항상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원의 배분과 재정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자는 항상 역사와 국민 앞에 웃거울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이 인정하는 재정의 집행이 요구된다. 재정은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자원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삼한통합을 이룬 김유신의 재정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한다.



# 재정정책의 현재와 경제 순환의 이해

## “적극적 재정 개입과 장기 경제 사이클을 읽다”

이 책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재정정책의 부활』

노진호 저 | 비른북스 (2025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금리 인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수요 부족과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재정정책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의 맥락에서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전통적 금리 조절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이 책은 인프라 투자, 사회안전망 확대, 인적자본 강화 등 전략적 재정지출이 장기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음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준다. 재정건전성과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찾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실용적 방향성을 제공하는 책이다.

#### 재정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 **통화정책의 한계 인식:** 저금리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의 실질 효과가 제한되며, 양적완화만으로는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이해한다.
- **전략적 재정지출의 중요성:** 인프라, 교육, R&D, 복지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된 재정지출이 단기 경기 부양과 장기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재정의 구조적 역할:** 소득 불평등 완화, 사회 통합, 경제 안정성 강화 등 단순 규모 확대를 넘어 국가 재정의 구조적 기능을 재정화하는 관점을 갖는다.



4월은 새 회계연도의 초기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을 보강하는 시기를 가졌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우리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정의 작동 원리와 경제 순환 속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홍준욱 저 | 프로제 (2025년)

저자는 거시경제의 호황과 침체, 자산가격의 상승과 조정이 결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논리와 주기를 따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통화 팽창기의 자산 거품과 신용 팽창, 그리고 뒤따르는 조정 국면까지의 흐름을 역사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이러한 반복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금리 인상, 금리 인하의 순환 속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미칠 실제 경제 효과는 시간차를 갖는다. 저자는 오늘의 재정 결정이 명일의 신용 사이클, 자산 시장, 국제 자본 흐름과 맞물려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드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시 단순한 경기 지표를 넘어 신용 사이클의 위치, 자산 시장 상황, 글로벌 자본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 경제 순환 흐름에 대한 이해

- **신용 사이클 진단**: 통화 완화→신용 팽창→자산 가격 상승→조정 국면의 반복 구조를 이해하고, 현재 경제가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 **정책 효과의 시차 인식**: 재정정책 집행과 경제 파급의 시간차, 과잉 부양과 수렴 국면 진입의 신호를 선제적으로 감지한다.
- **글로벌 자본 흐름의 주도성**: 국내외 금리 차,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만드는 국제 자본 흐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관점에서 설계한다.



이 책은

경제 사이클과  
자산 흐름을 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실전 투자 전략서





## NEWS

2026 April vol. 112

## 한국재정정보원,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재정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19일 본원을 방문한 미주개발은행(IDB) 마르타 루이즈 아란즈 재정관리국장과 면담을 갖고, 중남미 국가들의 재정관리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과 정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으며, 중남미 지역의 재정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석호 원장은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노하우를 소개하고, 향후 중남미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2026 April vol. 112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데이터 분석사례 발굴 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2026년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재정데이터 분석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방된 재정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례 발굴과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14개 팀(45명)이 참여해 국가 재정, 청년 지원, 지방 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과제를 수행했다. 최우수상은 '재정 낭비 3대 패턴 분석을 통한 위험도 산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수행한 '재정 LAB(재정 연구)' 팀이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석호 원장은 "이번 대회가 재정 데이터 활용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 제언과 연계하고 정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재정 정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애독자 코너

• 2026.04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방산,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경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2026년 추경예산을 편성한 정부 부처는  
어디일까요?

- ① 산업통상부                      ② 기획예산처
- ③ 재정경제부                      ④ 행정안전부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4.30. ~ 5.14.

★ 지난호 정답: ② 중장기전략위원회

★ 지난호 퀴즈 당첨자

|               |               |               |
|---------------|---------------|---------------|
| 010-****-2883 | 010-****-7702 |               |
| 010-****-1456 | 010-****-0706 | 010-****-7426 |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정보 변경 및 기타 월간『나라재정』과 관련한 궁금증은 02-6908-8634로 문의 바랍니다.

# 2026

Tae'an International  
Horticultural Healing Expo



# 태안국제원예 치유박람회

꽃처럼 피어나는  
치유의 시간

2026  
4.25.(토)

5.24.(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



주최



주관



(재) 태안국제원예치유  
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HOBAN



한국서부발전

공인



기획예산처



# 수요일은 문화일

문화가 있는 날 2026년 4월  
매주 수요일 확대

도서·영화·공연·전시·문화유산

지역 특화 프로그램

온라인 문화 콘텐츠

